

#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특징과 변화추이

2014. 11. 12

성명재



홍익대학교

---

# **구 성**

---

- 1. 소득분배 구조**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4. 기타**

---

# 1. 소득분배 구조

# 1. 소득분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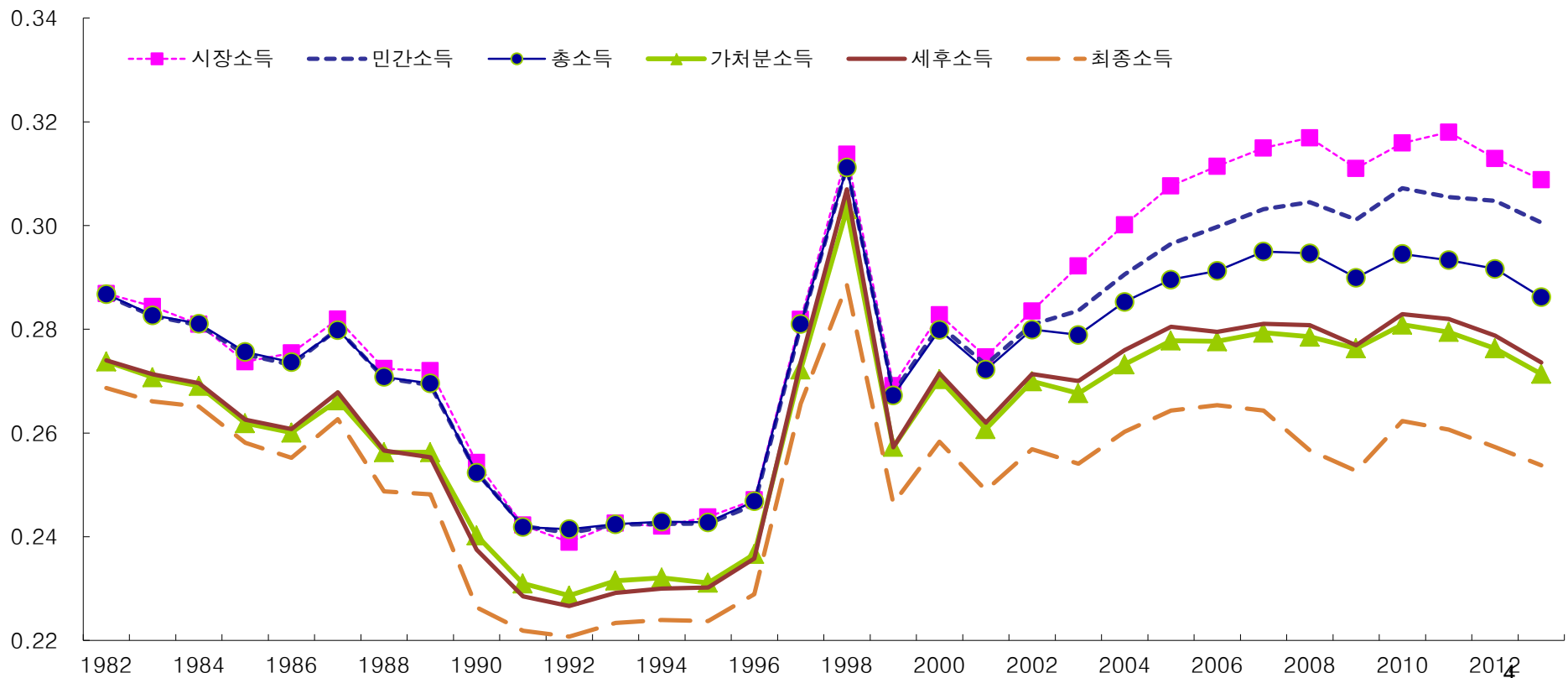
## 가.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1997~1998년의 외환 및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형 변화추이를 시현

○ 최근 수년간 지니계수 하락은 다소 이례적

○ 각 소득지니간 거리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나타냄.

[그림 1] 소득종류별의 지니계수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저자 추정치

# 1. 소득분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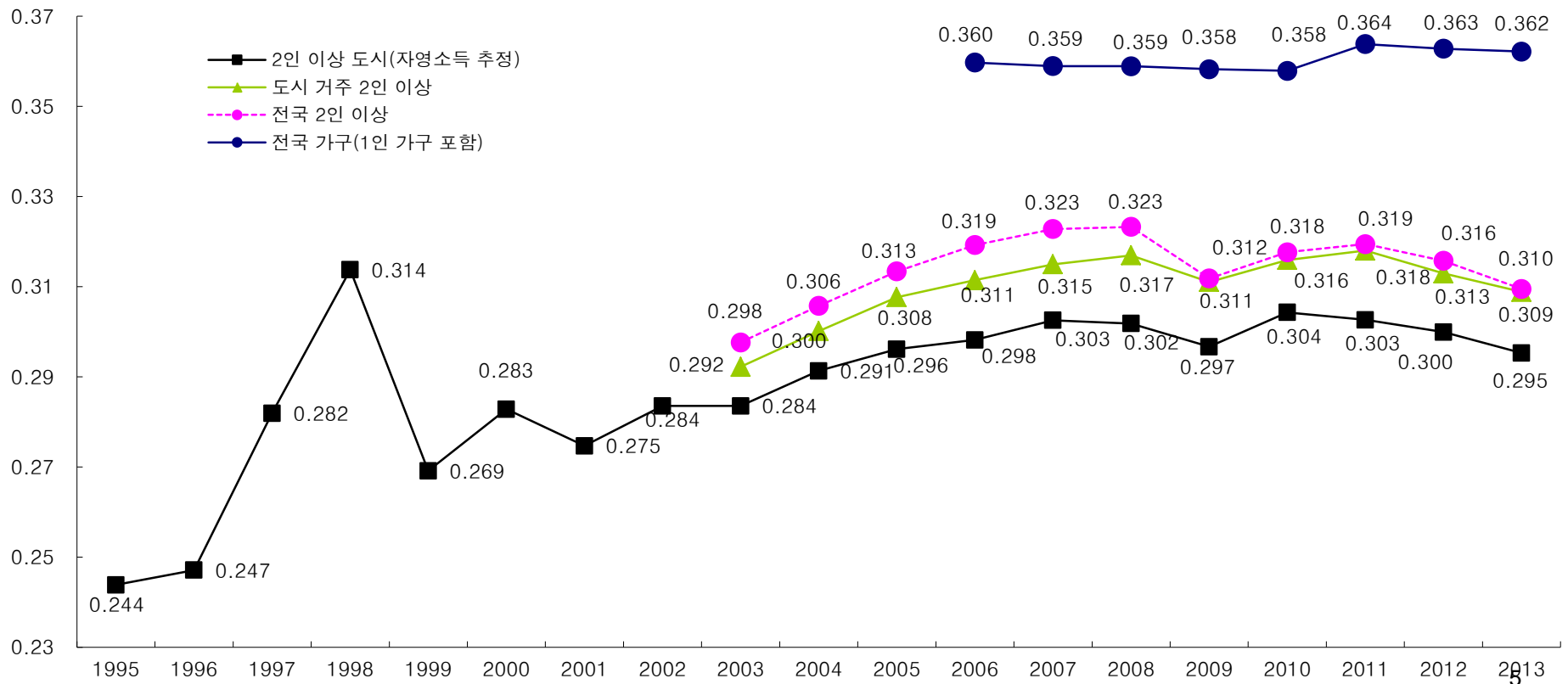
## 가.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근 소득불균등도가 소폭 하락하는 반면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폭 상향평준화 추세

○ 고령화·청년실업 증가 등 **단독가구비중 확대**가 **소득불균등도의 확대**를 시사

○ e.g.: **단독가구 vs. 2인 이상 가구** 사이의 경쟁 또는 대체효과 등

[그림 2]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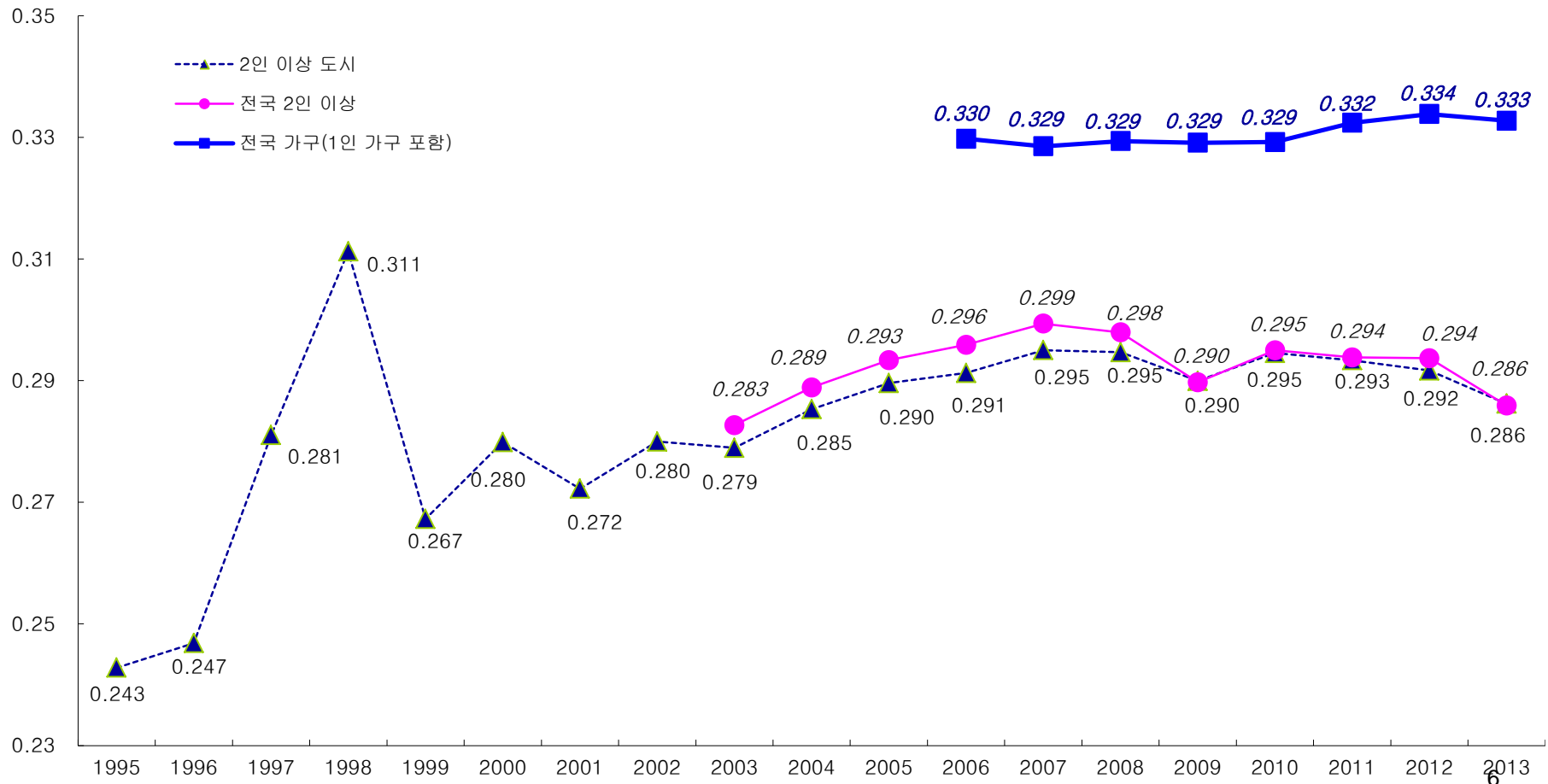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저자 추정치

# 1. 소득분배 구조

## 가.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총소득의 불균등도는 시장소득불평등도에 비해 절대수준이 크게 낮아지나 변화 패턴은 비슷

[그림 3] 총소득 지니계수 추이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저자 추정치

# 1. 소득분배 구조

## 가.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 1980년대 ~ 1990년대 초: 상대소득격차 축소
  - Kuznets의 역U자 가설 중 후기 단계
- 1990년대 초~중반:
  - 지니계수가 저점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
-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소득격차 확대추세로 반전
  - 단, 1997~1998년은 외환·경제위기로 overshooting
  - 2000년대 이후 지니계수는 완만한 상승 추세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개
    - 2가지 요인 모두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선진국에서는 70년대말~8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전개되면서 소득불평등 확대
  - 2000년대 후반 이후 지니계수 하락: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득불균등도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다소 이례적
    - 초고소득층 undersampling 가능성, 가구크기간 대체효과, 고령화 등

# 1. 소득분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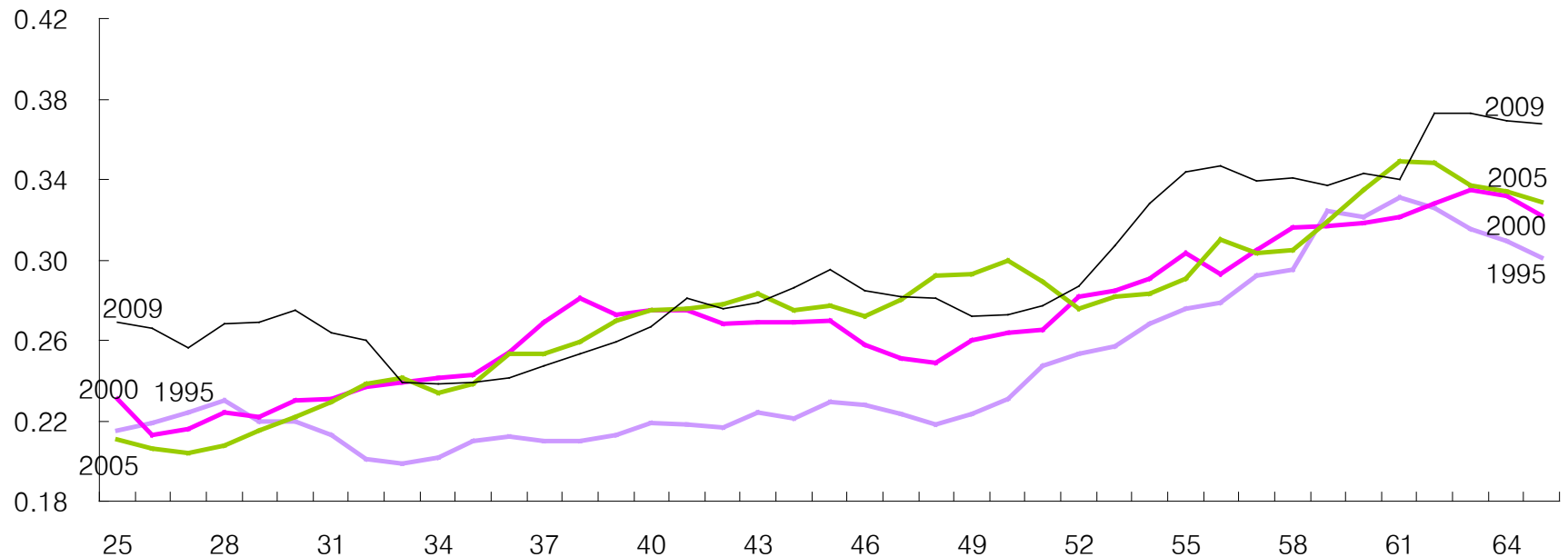
## 나.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연령과 소득불평등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연령층 일수록 상대소득불평등도가 확대**

○ 시장에서 **소득획득력 차이**에 기반한 시장선택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  
- 단, 고연령층일수록 최저 vs 최고소득 절대소득수준의 차이는 축소

○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

[그림 4] 연령대별 지니계수의 특징





## 1. 소득분배 구조

###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 실업률과 지니계수

- 실업률, 무직가구, 지니계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 존재 ([그림 5] 참조)
- 1980~1990년대초: 실업률이 4%대 중반에서 2%대로 낮아지면서 지니계수도 작아짐.
- 다만 1990년대말부터는 인구의 고령화 효과가 가시화

#### □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무직가구비율도 증가 ([그림 5] 참조)

- **무직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 확대**를 의미 ([그림 6] 참조)
- 무직가구비 상승의 소득불평등 확대기여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만하게 증가
- 경제위기 기간에는 무직가구의 **빈곤갭**이 극단적으로 확대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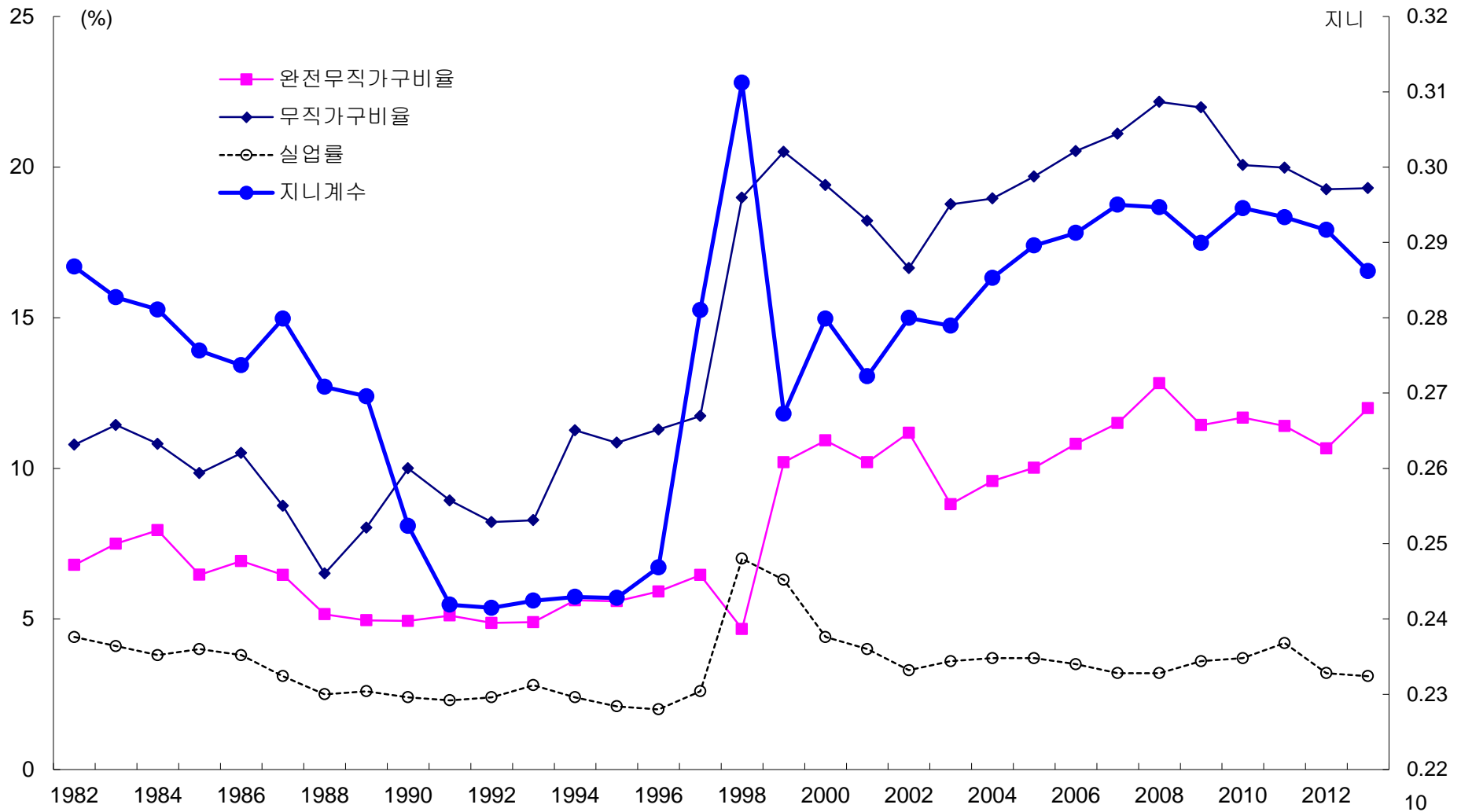
#### □ 실업률보다 무직가구비율이 높은 이유

- 무직가구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로 정의
  - 무직가구라고 해도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은 취업자인 경우가 다수 존재
- 은퇴가구는 무직가구에 포함되나 실업률 통계에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

# 1. 소득분배 구조

##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그림 5] 무직가구비와 실업률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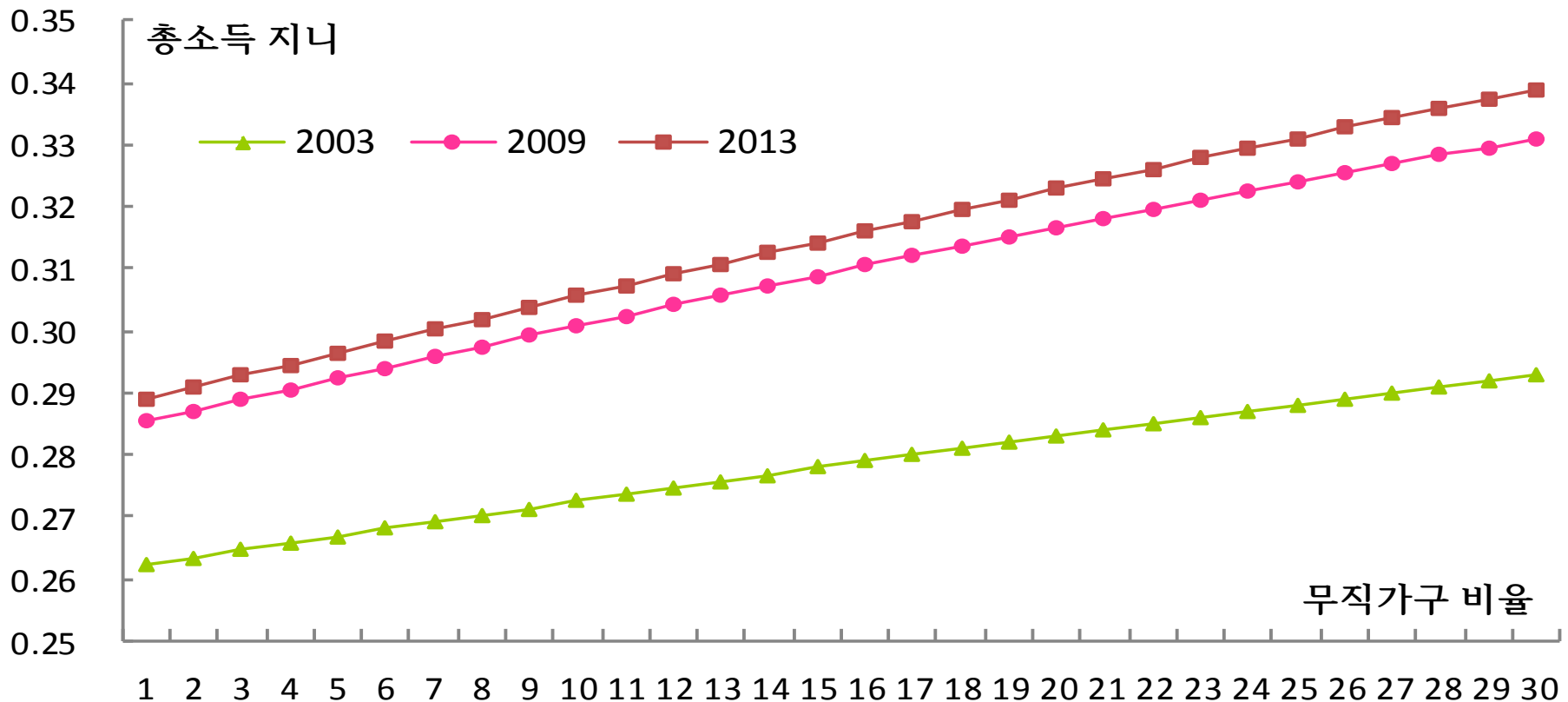


# 1. 소득분배 구조

##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무직가구비율의 증가는 거의 선형적으로 소득불평등도(지니)를 악화시킴.

[그림 6] 무직가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효과 (모의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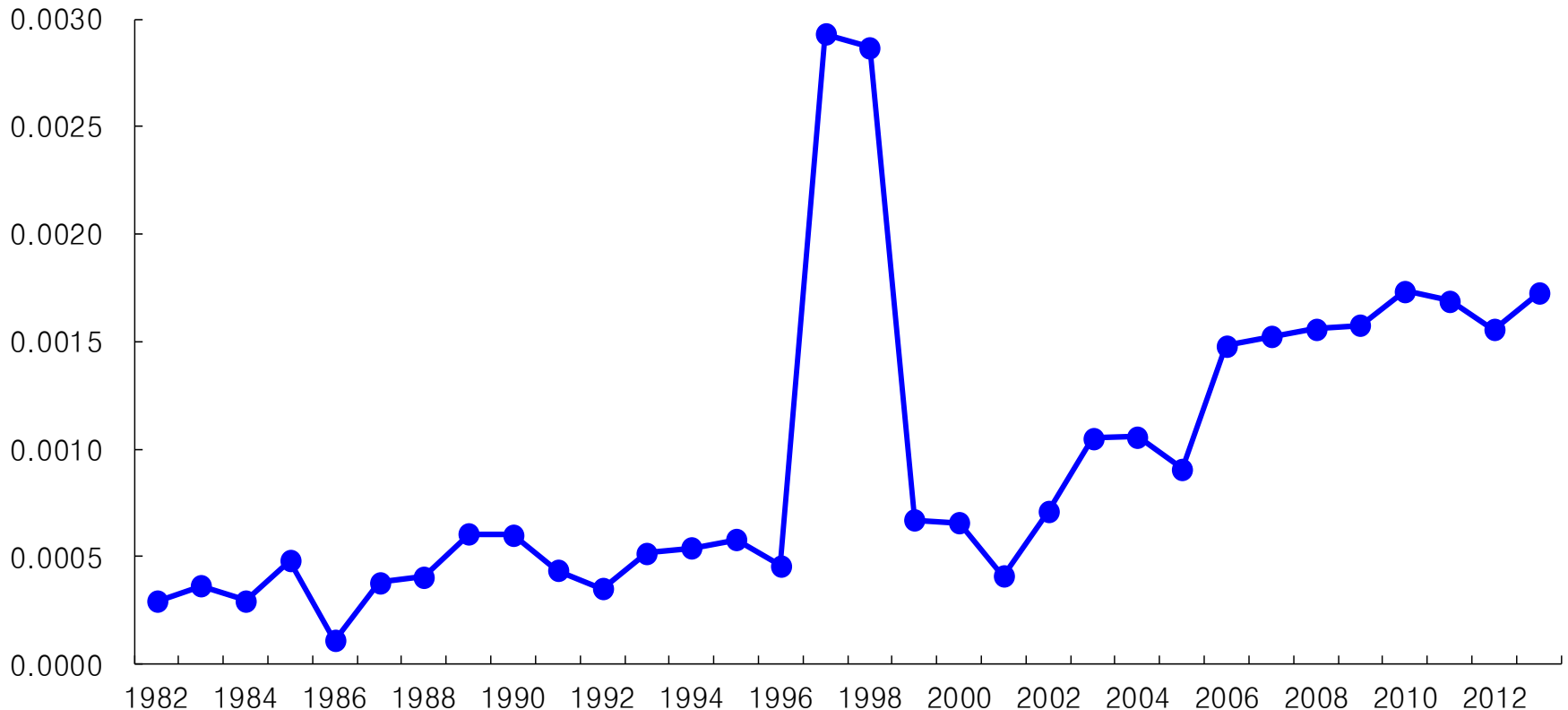
주: 2003년은 2인 이상 전국 가구, 2009년과 2013년은 1인 가구 포함 전국단위 가구 기준

## 1. 소득분배 구조

### 다. 소득불평등 구조의 특징: 실업률과 지니계수

- 무직가구비 증가의 소득불평등도(지니) 악화 기여도는 시계열적으로 완만하게 증가 (경제위기 기간 제외)

[그림 7] 무직가구비 1%p당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기여도 추정결과



# 1. 소득분배 구조

## 라. 소득분위별 소득이동성(재정패널자료)

- 시계열적으로 가구별 소속 소득분위는 가변적: 높은 이동성 (평균지향효과)
- 예: 1분위 가구는 다음기에 45% 정도가 1분위 탈출, 10분위는 34%가 하방이동
  -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동성은 소득불균등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 가능
- [표 1] 소득분위별 소득이동성: 분위간 이행확률(소득이행행렬, 재정패널자료 기준)

2007/200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0.55	0.27	0.08	0.04	0.02	0.01	0.01	0.01	0.01	0.01	1
2분위	0.19	0.38	0.24	0.08	0.06	0.03	0.01	0.01	0	0	1
3분위	0.06	0.13	0.33	0.23	0.13	0.06	0.03	0.01	0.01	0	1
4분위	0.06	0.08	0.15	0.25	0.22	0.11	0.07	0.02	0.01	0.02	1
5분위	0.06	0.04	0.07	0.14	0.25	0.23	0.09	0.07	0.04	0.03	1
6분위	0.02	0.02	0.03	0.11	0.13	0.26	0.25	0.11	0.05	0.01	1
7분위	0.02	0.03	0.03	0.04	0.07	0.14	0.27	0.3	0.07	0.03	1
8분위	0.01	0.03	0.02	0.04	0.04	0.08	0.14	0.3	0.28	0.07	1
9분위	0.01	0	0.02	0.02	0.04	0.04	0.09	0.14	0.4	0.22	1
10분위	0	0.01	0.01	0.01	0.02	0.03	0.04	0.06	0.17	0.66	1
계	0.99	0.99	0.97	0.97	0.98	0.99	1	1.01	1.04	1.05	-
2008/2009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0.57	0.21	0.08	0.05	0.04	0.02	0.01	0.01	0	0	1
2분위	0.26	0.43	0.15	0.08	0.03	0.02	0.01	0.01	0	0.01	1
3분위	0.07	0.21	0.31	0.21	0.1	0.05	0.02	0.03	0.01	0	1
4분위	0.03	0.07	0.23	0.29	0.22	0.06	0.05	0.03	0.01	0.01	1
5분위	0.05	0.05	0.11	0.2	0.25	0.18	0.1	0.04	0.02	0.01	1
6분위	0.03	0.03	0.05	0.07	0.21	0.29	0.17	0.08	0.04	0.02	1
7분위	0.01	0.01	0.03	0.05	0.08	0.21	0.3	0.19	0.08	0.04	1
8분위	0.01	0	0.02	0.02	0.03	0.11	0.21	0.36	0.19	0.04	1
9분위	0	0	0.02	0.02	0.03	0.03	0.08	0.18	0.46	0.18	1
10분위	0	0.02	0.01	0	0.01	0.02	0.03	0.06	0.19	0.67	1
계	1.04	1.03	1.01	1	0.99	0.99	0.98	0.99	0.99	0.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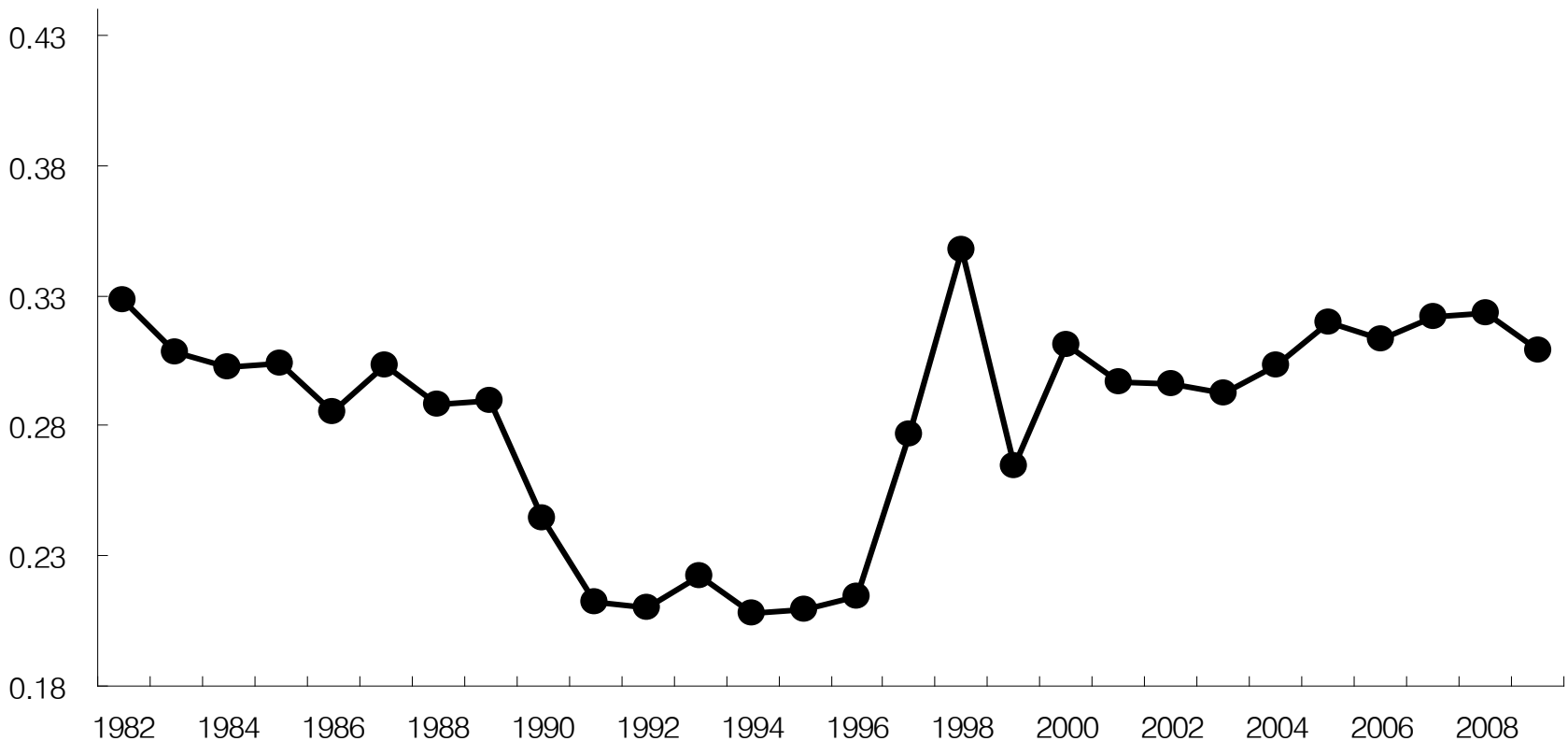
주: 종축은 전년도, 횡축은 익년도의 소득10분위를 나타냄.

출처: 성명재(2011)의 <표 III-8> 인용

# 1. 소득분배 구조

## 마.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성명재·박기백(2009)

[그림 8] 변이제공계수(SCV)의 변화추이 (1982~2009,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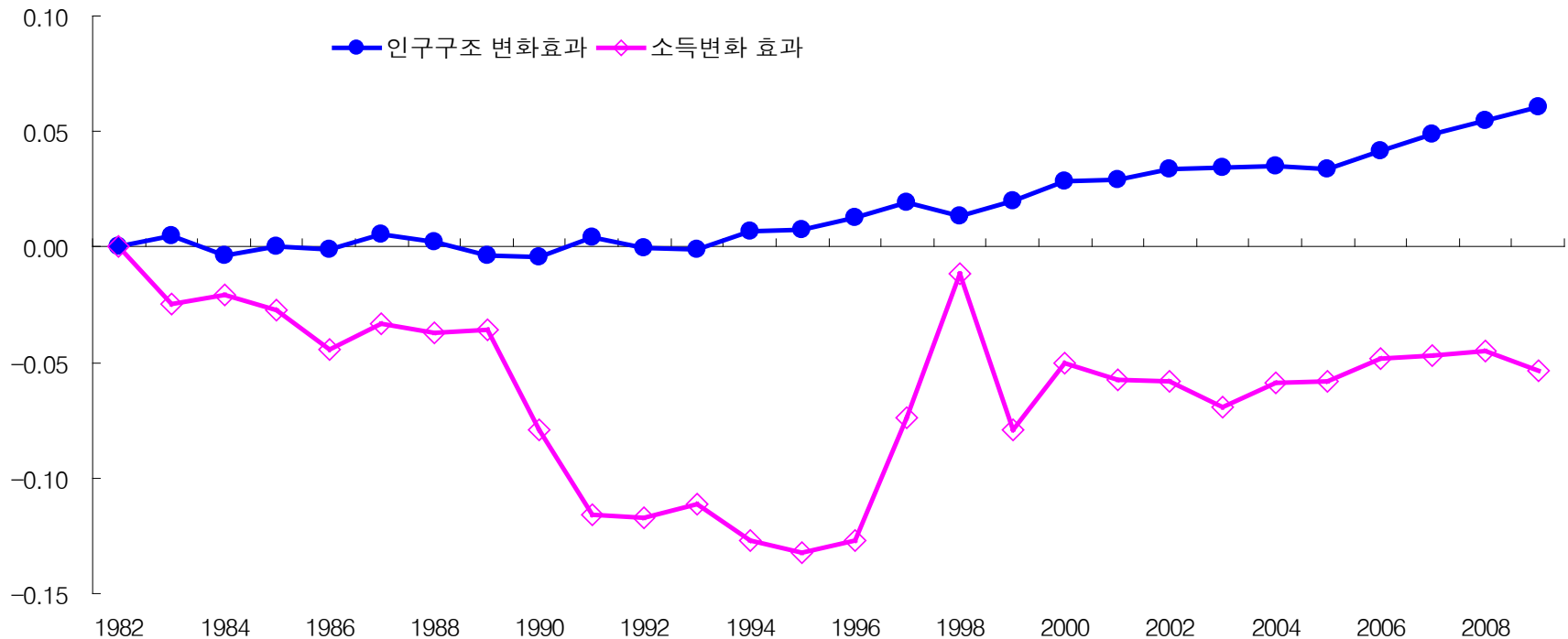
자료: 성명재·박기백 (2009) & 저자 추정치

# 1. 소득분배 구조

## 마.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성명재·박기백(2009)

- 지수의 분해가 용이한 SCV를 사용하여 1982~2009년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
  - 1982년을 기점으로 SCV 변화분을 누적하여 인구구조 요인과 기타 요인(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9] 1982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82~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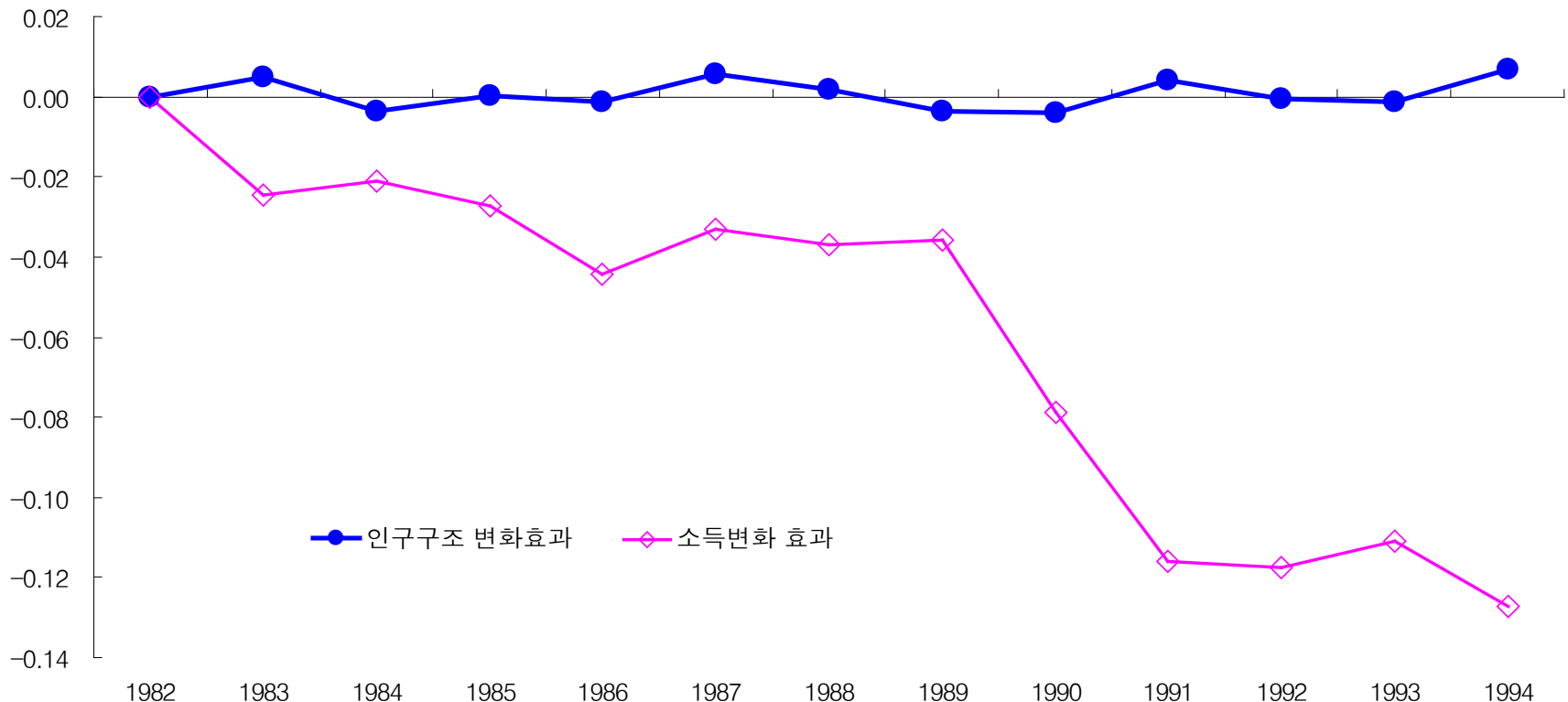


# 1. 소득분배 구조

## 마.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성명재·박기백(2009)

- 1982~1994년 기간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SCV 변화효과는 거의 0
- 이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

[그림 10] 1982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82~1994)



자료: 성명재·박기백 (2009) & 저자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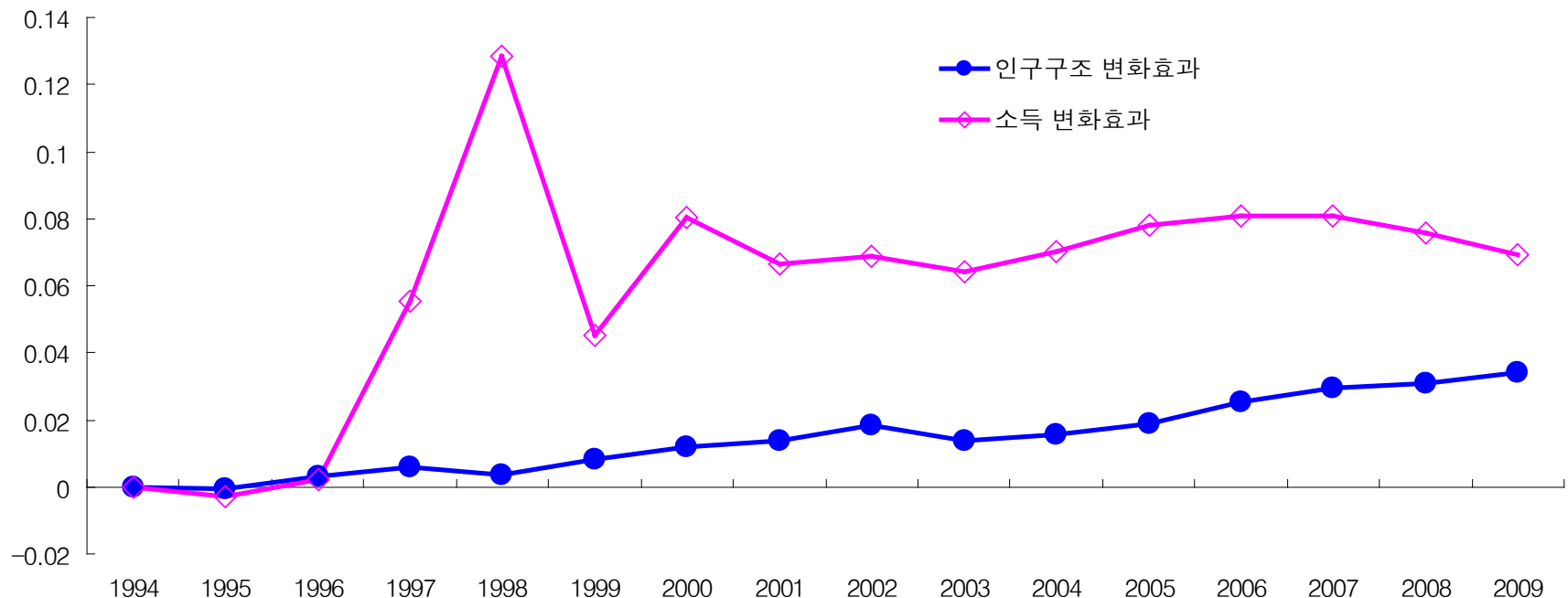


# 1. 소득분배 구조

## 마.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성명재·박기백(2009)

- 1994~2009년의 경우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변화폭이 지배적으로 크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소득불평등을 빠르게 확대시키기 시작
  -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 등의 효과는 안정화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득불균등도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그림 11] 1994년 변이자승계수(SCV) 대비 누적 절대변화효과 분해 (1994~2009)



자료: 성명재·박기백 (2009) & 저자 추정치

## 1. 소득분배 구조

### 마. 인구고령화의 소득분배 영향: 성명재·박기백(2009)

- 1980~1990년대 중반: 경제구조 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를 대부분 결정
  - 1990년대말부터 인구의 고령화 효과가 가시화
- 1990년대 중반~최근: 경제구조 등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안정화되는 반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분배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시작
  - 통계청 예측결과 향후 2050년까지도 노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확대는 향후 계속될 전망
  - 성명재·박기백(2009)의 전망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50년의 SCV는 2008년 대비 27.5%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래의 소득불평등 대응 정책방향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더라도 노인대책 위주의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
  -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도 필수적

# 1. 소득분배 구조

## 바. 시사점 및 정책대응방향

-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격차 확대 요인 종합
  - 경제위기 기간: 실업·실직 등 저소득층의 몰락이 주요 요인
  - 2000년 이후: 급속한 **인구고령화 & 경제패러다임 변화** → 고소득층 소득이 급속 증가
- 경제위기 대응형 대응방향
  - 단기정책: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지지정책이 필요
  - 중·장기정책: 교육·재활훈련 등을 통한 근본적 생활지지정책이 필요
- 경제패러다임 변화 대응형 대응방향
  - 기업가정신, 혁신, 생산성 증대, 정보화 무장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 경제의 동학적 발전을 통한 분배구조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준비 필요
  - 즉흥적·즉각적인 지니계수 축소 정책보다는 장기적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긴요
-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Childcare 및 아동빈곤 방지정책 등 고령자(노약자), 실업자, 여성가家主(또는 편모가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전개
  - OECD: **소득불평등 지수 축소 자체를 소득분배 정책의 정책타겟으로 하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빈곤정책**이 소득분배 정책의 주요 핵심

---

## 2. 자산·부채 분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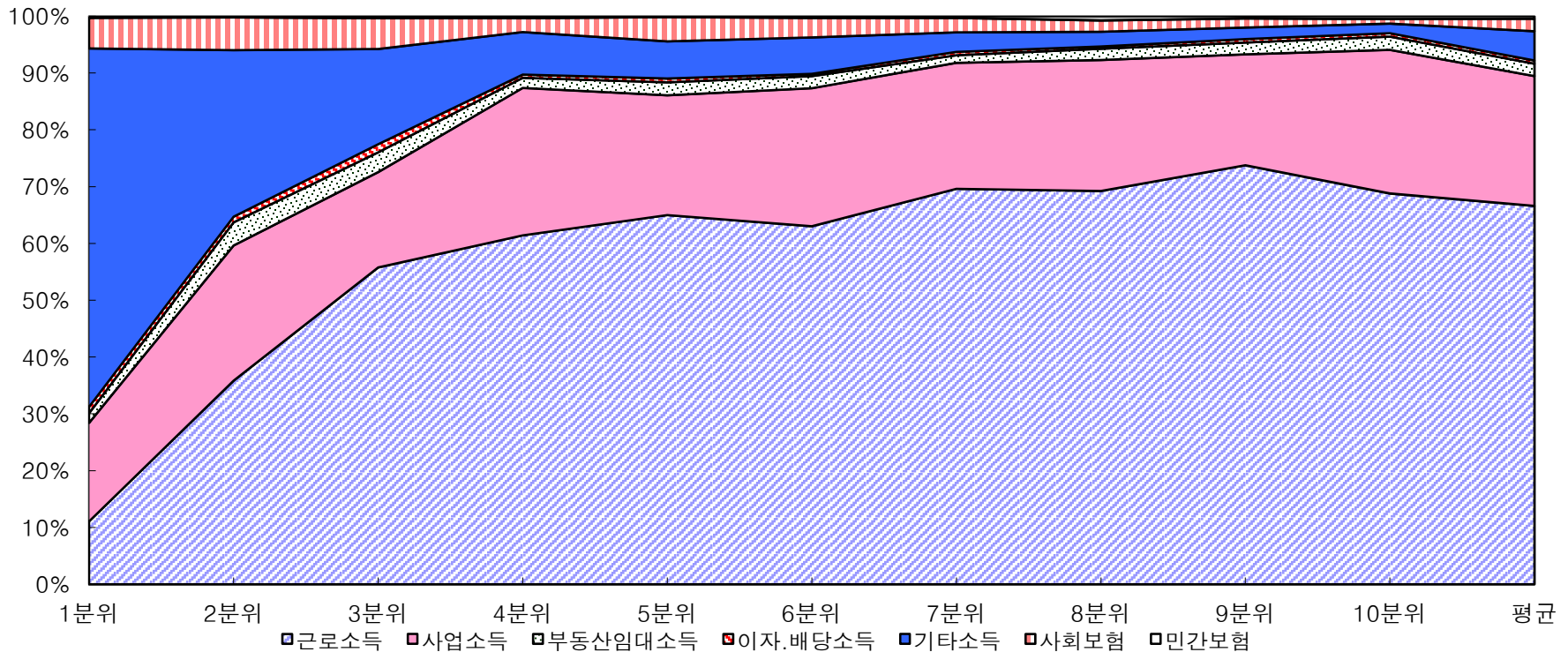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가. 가계 소득·자산·부채의 구성

□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성

○ **노년층** 가구비중이 높은 **최저소득층(1~2분위)**의 경우에는 상기의 시장소득비중이 낮은 반면 **이전소득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그림 12]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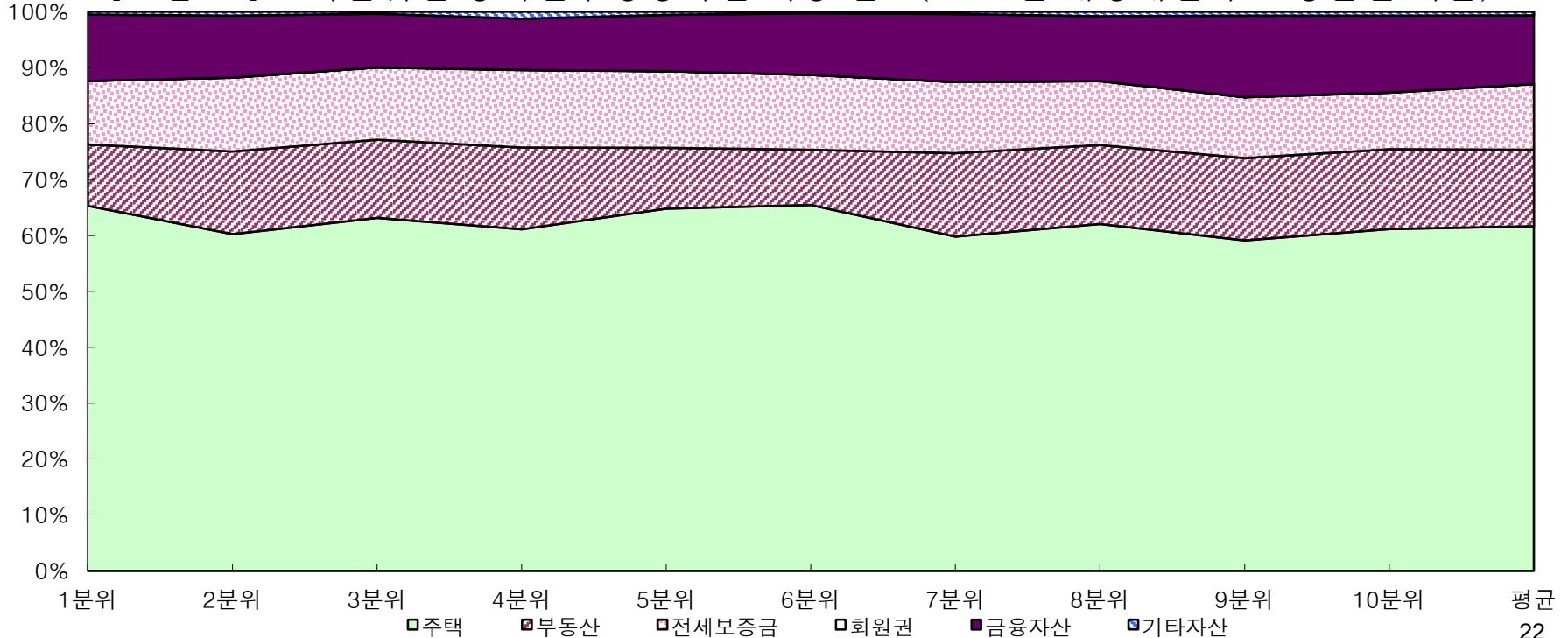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가. 가계 소득·자산·부채의 구성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은 주로 **주택**과 기타 **부동산**(주로 토지),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으로 구성

- 소득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별 상기 자산의 보유비중은 대동소이
- 따라서 소득과 각 자산유형간 분포구조는 대체로 소득비례적(또는 중립적)
- 자산 유형은 주택이 절대적이며,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은 10~20% 수준

[그림 13] 소득분위별 총자산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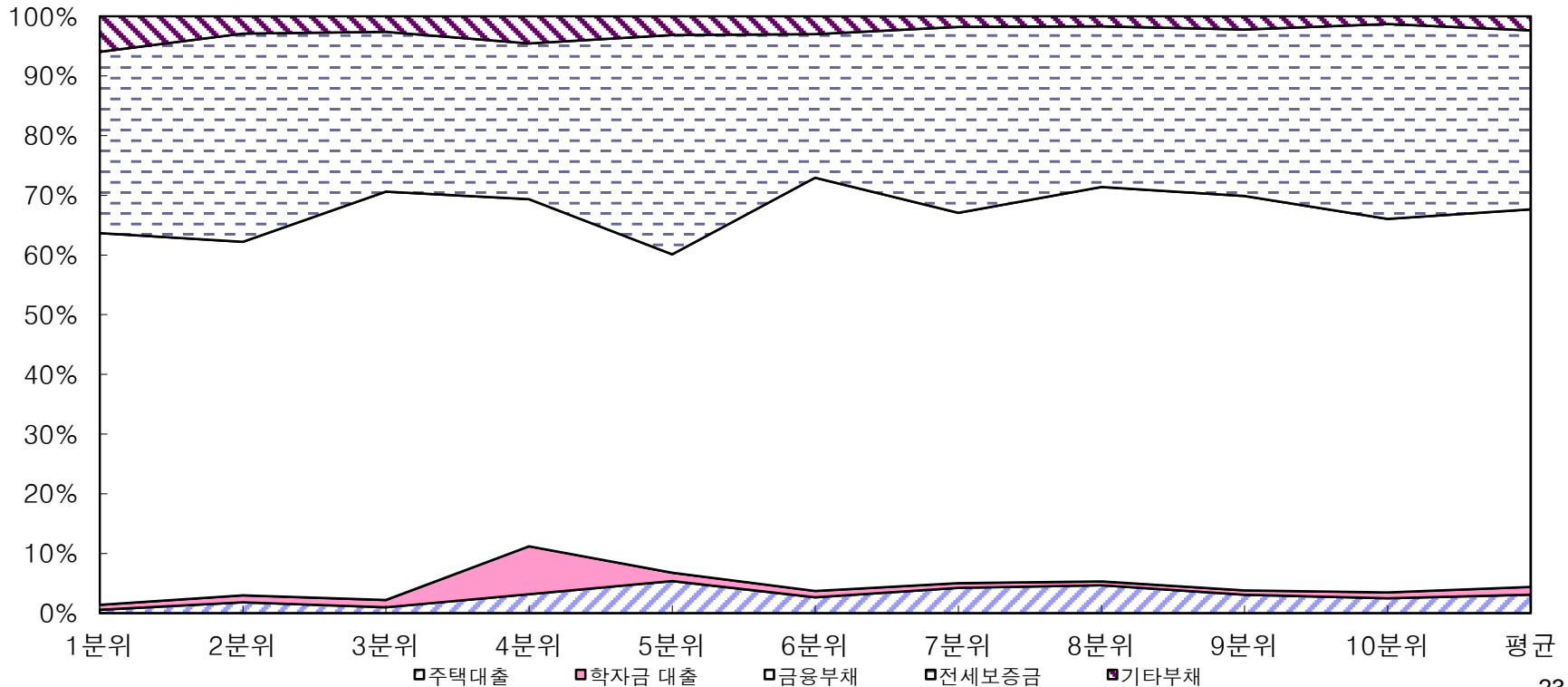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가. 가계 소득·자산·부채의 구성

□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는 주로 금융부채(대체로 전체의 60% 수준)와 전세보증금(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구성

○ 부채 역시 총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별 구성패턴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 : 소득비례적(또는 중립적)임을 시사

[그림 14] 소득분위별 부채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나. 소득계층별 자산 구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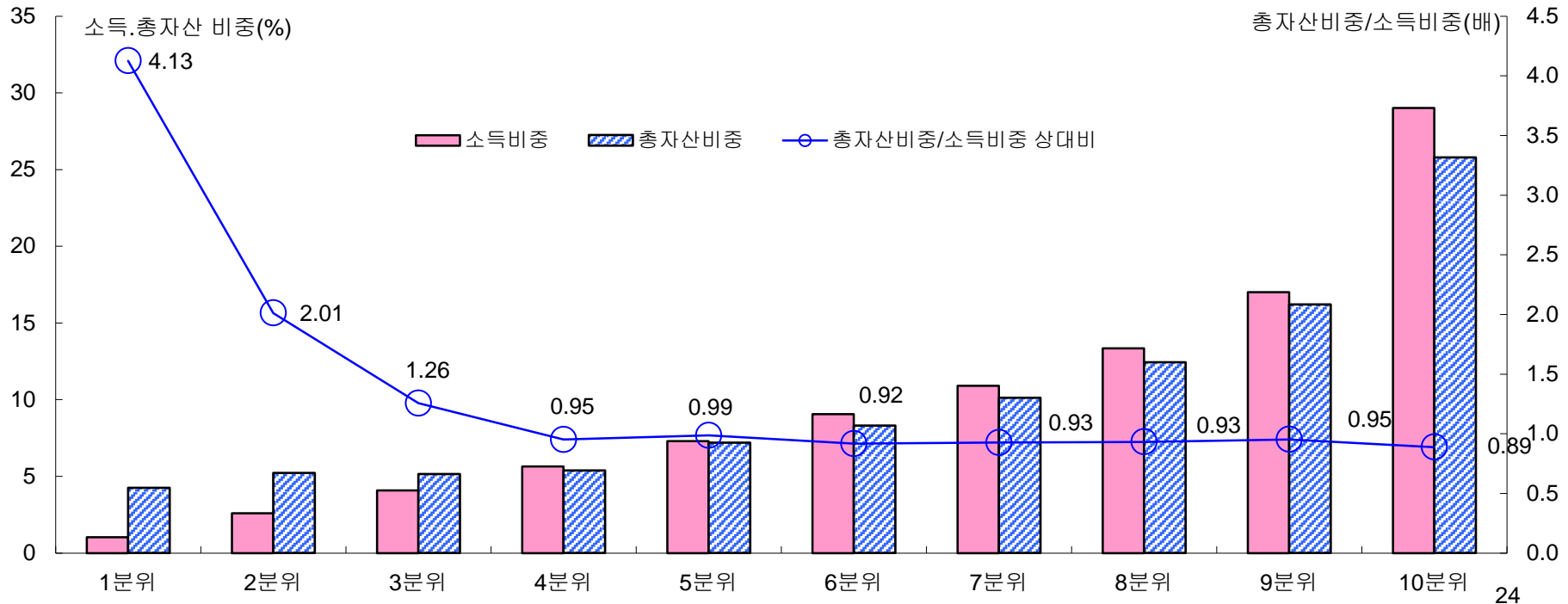
□ 가계의 자산보유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

○ 그러나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소득(또는 소득비중) 증가율에 비해 자산(또는 자산 비중) 증가율이 낮은 편

○ 따라서 **자산분배구조는 소득에 대해 역진적**: 간접적으로 재산과세의 **역진가능성**

- 이 경우 재산과세가 누진적이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거나 0일 수 있음

[그림 15] 소득분위별 소득·총자산 구성비율 및 상대비 분포(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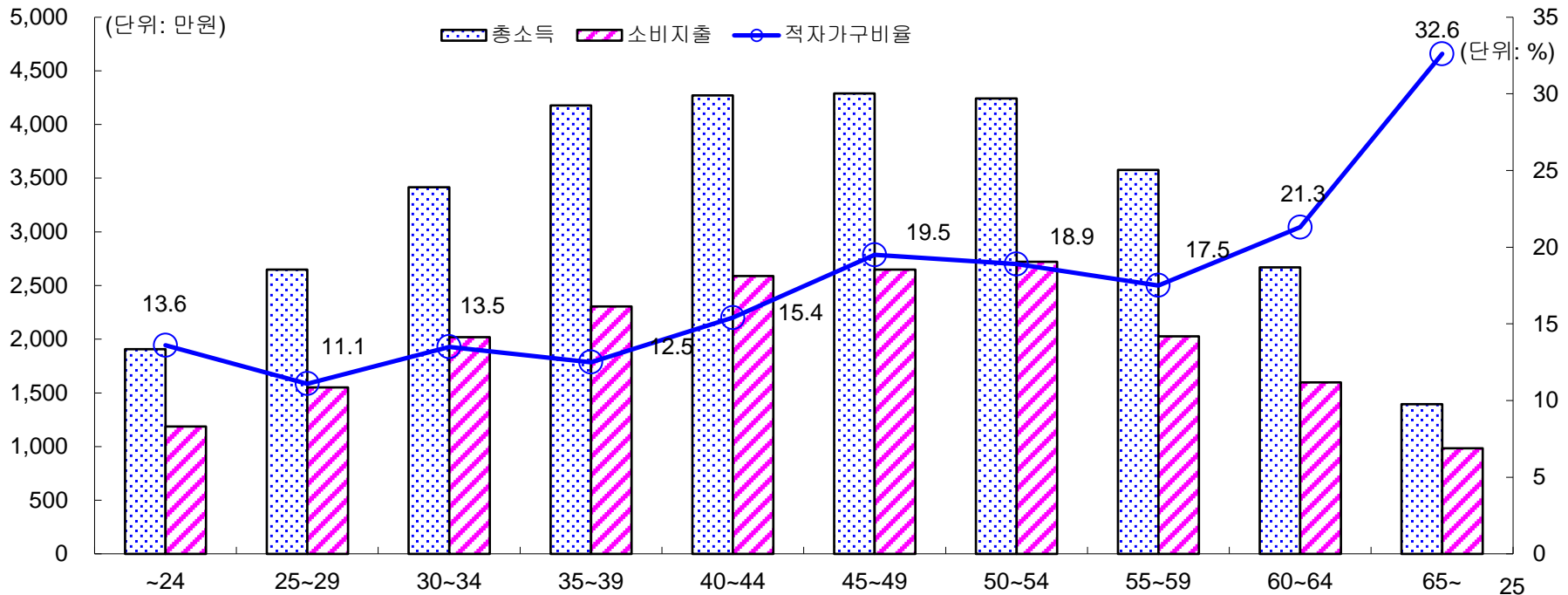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다. 연령별 분포 구조의 특징

- 가구주 연령 기준의 총소득·소비지출 분포는 **역U자** 형태
  - 일반적인 **생애주기 가설**에 기초한 소득·소비지출 흐름에 부합
  -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득 기준의 역U자 형태 및 적자가구비율의 패턴이 다소 차이가 존재
  - 은퇴기 이후 연령층의 적자가구비율 급상승은 생애주기 가설에 적절하게 부합

[그림 16] 가구주 연령별 총소득·소비지출·적자가구비율(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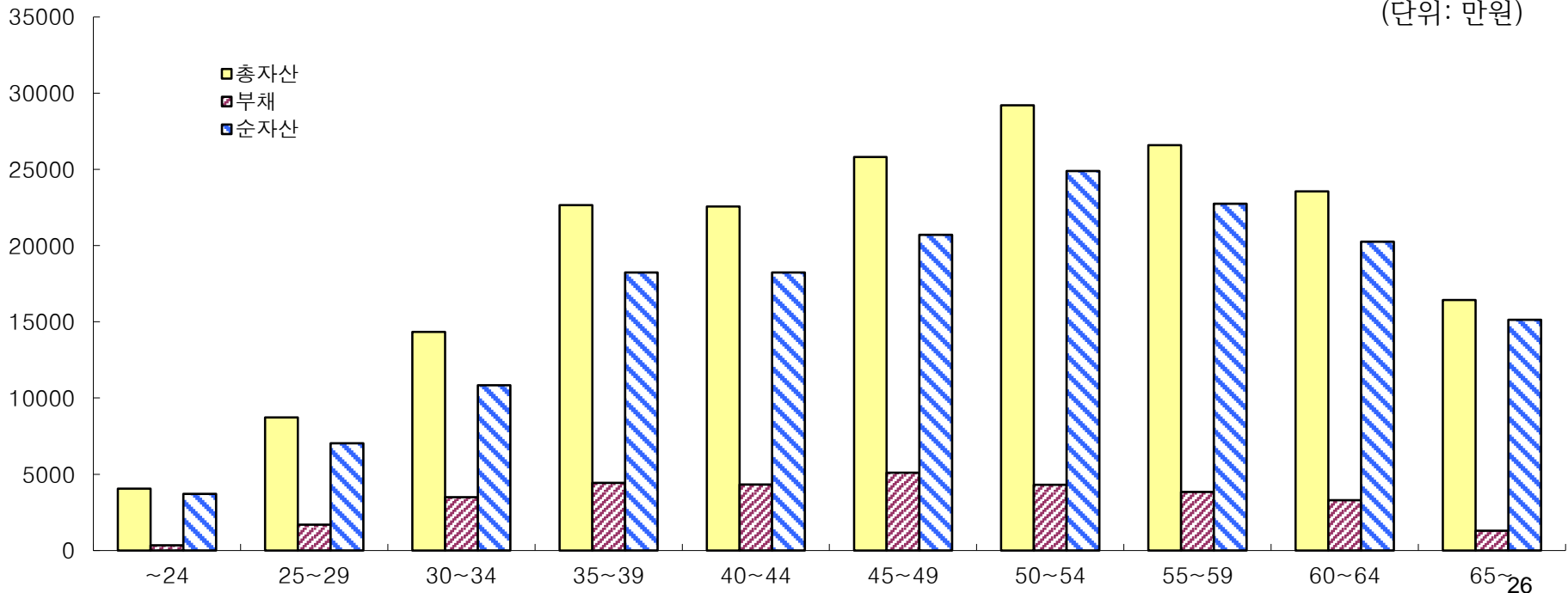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다. 연령별 분포 구조의 특징

#### □ 가구주 연령 기준의 자산·부채 분포는 역U자 형태

- 이는 역U자 형태의 생애주기 소득흐름과 이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소비지출흐름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득·소비지출의 생애주기 분포와 유사
- 생애주기상 **은퇴기 직전의 연령층(주로 50대)**에서 정(+)의 저축이 부(-)의 저축으로 전환: 그 즈음 총자산(또는 순자산)이 극대화
  - 이후 **자녀 혼수비용, 은퇴후 작은 주택으로의 전환** 등

[그림 17]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부채·순자산 분포(2009년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 2. 자산·부채 분배 구조

### 라. 분포 집중도의 비교

□ 자산, 부채, 순자산의 경우 모두 자기순서 기준의 집중도(지니계수)는 상당히 높지만, 소득순서로 재배열하면 소득의 경우보다 지니계수가 작아짐

○ 소득과 자산·부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후자의 분포는 소득역진적인 것이 특징

○ 재산과세의 누진도가 매우 큰 경우가 아니라면 정(+)의 소득재분배가 어려움을 시사

[표 2] 소득·자산·부채의 집중도(지니계수, 재정패널자료 기준)

지니계수	연도	총소득순위 기준	자기순위 기준
가구소득	2007	0.42340	0.42340
	2008	0.43705	0.43705
	2009	0.42544	0.42544
소비지출	2007	0.25966	0.36740
	2008	0.26323	0.35677
	2009	0.25454	0.35645
총자산	2007	0.33405	0.63948
	2008	0.33465	0.62114
	2009	0.32920	0.62214
부채	2007	0.33019	0.80816
	2008	0.32056	0.80171
	2009	0.32815	0.79663
순자산	2007	0.33480	0.70082
	2008	0.33755	0.66807
	2009	0.32941	0.65988

---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 □ 포괄범위

- 부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 수혜: 현금급여(정부이전소득), 현물급여 중 사회분야 지출과 교육

##### □ 조세·재정지출의 추정

- 현금수혜(=공적연금+기타사회보장수혜):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정보 이용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기타사회보장수혜: 기초생보(현금), 실업급여 등
- 직접세
  - 소득세: 자료로부터 세부담을 impute
    - 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세 정보는 매우 부정확
    - 특히 사업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을 나타내므로 시점이 불일치
  -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정보 이용
  - 법인세 등은 추정·배분이 곤란하여 제외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 □ 조세·재정지출의 추정(계속)

- 간접세(소비세): 자료로부터 세목별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세부담을 impute
  - 소비세의 종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 현물급여: 자료에서 수혜기준 충족가구 추정 및 집계자료 등으로부터 수혜가구당 또는 수혜인원당 수혜액을 추정하여 배분
  - 사회지출 + 교육지출을 대상
    - 국민기초생보 (의료급여, 교육급여)
    - 국민건강보험
    - 교육(초·중·고·대학생)
    - 보육(저소득층, 시설)
    - 주택(구매, 전세, 임대, 국민주택 등)
  - 기타 일반공공행정, 국방 등은 분석에서 제외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표 3> 국민부담·사회지출수혜의 소득계층별 금액 분포(2013년, 가계조사자료 추정치 기준)  
(단위: 천원,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상대비 (10/1분위)
시장소득	6,466	13,256	20,837	28,887	34,611	40,771	48,396	58,105	70,010	102,011	42,340	15.78
민간이전소득	1,434	2,055	2,079	1,635	2,293	2,782	2,547	2,563	3,293	4,075	2,476	2.84
민간소득	7,900	15,311	22,916	30,522	36,904	43,553	50,943	60,668	73,303	106,086	44,816	13.43
공적연금수혜	1,453	1,768	1,724	1,747	1,739	1,556	1,553	1,462	1,456	1,352	1,581	0.93
기타사회보장수혜	508	868	750	545	700	726	667	516	503	639	642	1.26
공적이전소득 소계	1,962	2,637	2,473	2,292	2,439	2,281	2,220	1,978	1,959	1,990	2,223	1.01
이전소득 계	3,396	4,692	4,553	3,927	4,732	5,064	4,767	4,541	5,252	6,065	4,699	1.79
총소득	9,862	17,948	25,390	32,814	39,343	45,834	53,163	62,646	75,262	108,076	47,039	10.96
소득세	21	106	257	450	756	1,089	1,584	2,392	3,585	7,710	1,796	367.14
재산세	68	132	142	120	186	170	220	230	298	406	197	5.97
직접세 소계	89	238	399	570	943	1,259	1,804	2,622	3,884	8,116	1,993	91.19
연금기여금	43	158	409	725	885	1,135	1,417	1,776	2,108	2,890	1,155	67.21
건강보험료	172	301	522	739	888	1,086	1,252	1,513	1,798	2,524	1,080	14.67
기타사회보험료	4	13	34	66	79	97	121	149	178	238	98	59.50
사회보험료 계	219	472	965	1,530	1,852	2,319	2,790	3,438	4,083	5,652	2,332	25.81
직접세 총계	308	710	1,364	2,100	2,795	3,578	4,594	6,060	7,967	13,768	4,325	44.70
가처분소득	9,554	17,238	24,026	30,714	36,548	42,256	48,568	56,587	67,294	94,309	42,714	9.87
부가가치세	373	647	1,000	1,312	1,535	1,735	1,985	2,194	2,490	3,340	1,661	8.95
개별소비세	54	129	174	265	254	272	340	387	464	677	301	12.46
교통·에너지·환경세	44	153	351	532	614	759	970	1,073	1,202	1,577	728	35.48
주세	58	81	135	180	166	171	180	193	207	225	162	3.85
담배세	66	127	139	191	196	185	177	161	184	157	158	2.36
소비세 계	597	1,137	1,799	2,480	2,765	3,122	3,651	4,009	4,546	5,976	3,010	10.01
세후소득	8,957	16,101	22,227	28,234	33,783	39,134	44,917	52,578	62,748	88,333	39,704	9.86
기초생활보장물급여	704	137	0	0	0	0	0	0	0	0	84	0.00
건강보험급여	2,280	2,349	2,093	1,963	1,928	1,910	1,995	1,892	2,048	2,072	2,053	0.91
교육급여	247	562	1,458	1,872	2,845	3,510	3,746	4,451	4,704	5,409	2,881	21.90
보육급여	5	28	146	411	391	363	419	436	346	284	283	56.80
주택급여	18	22	51	27	47	4	6	1	0	0	18	0.00
현물급여 계	3,255	3,099	3,750	4,273	5,212	5,787	6,166	6,780	7,098	7,765	5,319	2.39
최종소득	12,212	19,200	25,977	32,507	38,995	44,921	51,083	59,358	69,846	96,098	45,023	7.87

주: 누적효과(cascading effect, 명목세부담의 약 20%)를 비례적으로 배분한 추정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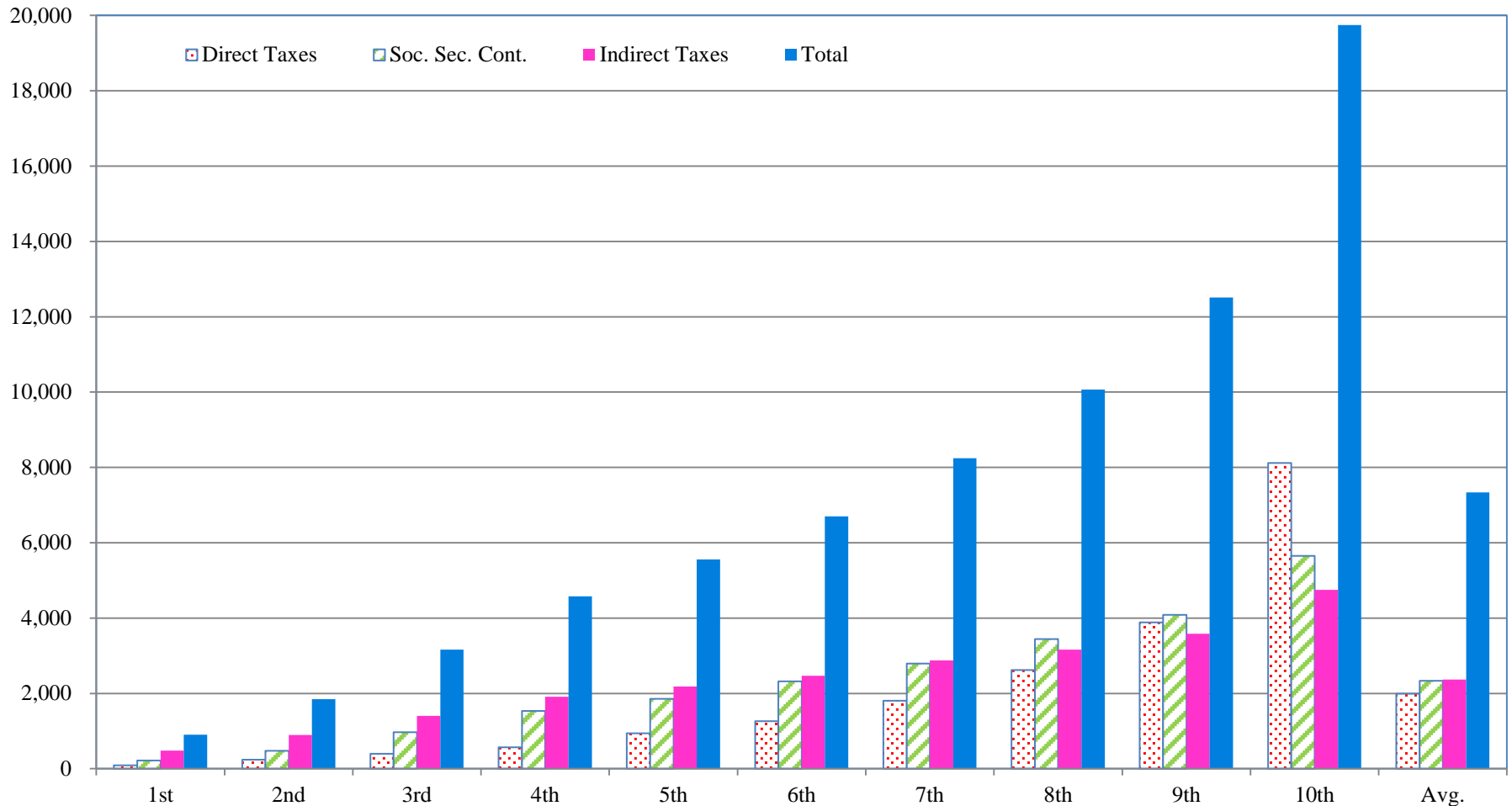
개별소비세제는 실제 세수를 총추계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수조정 한 값 기준임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18] 부담의 소득계층별 분포(2013년)

(단위: 천원)



주: 누적효과(cascading effect, 명목세부담의 약 20%)를 비례적으로 배분한 추정결과임.

개별소비세제는 실제 세수를 총추계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수조정 한 값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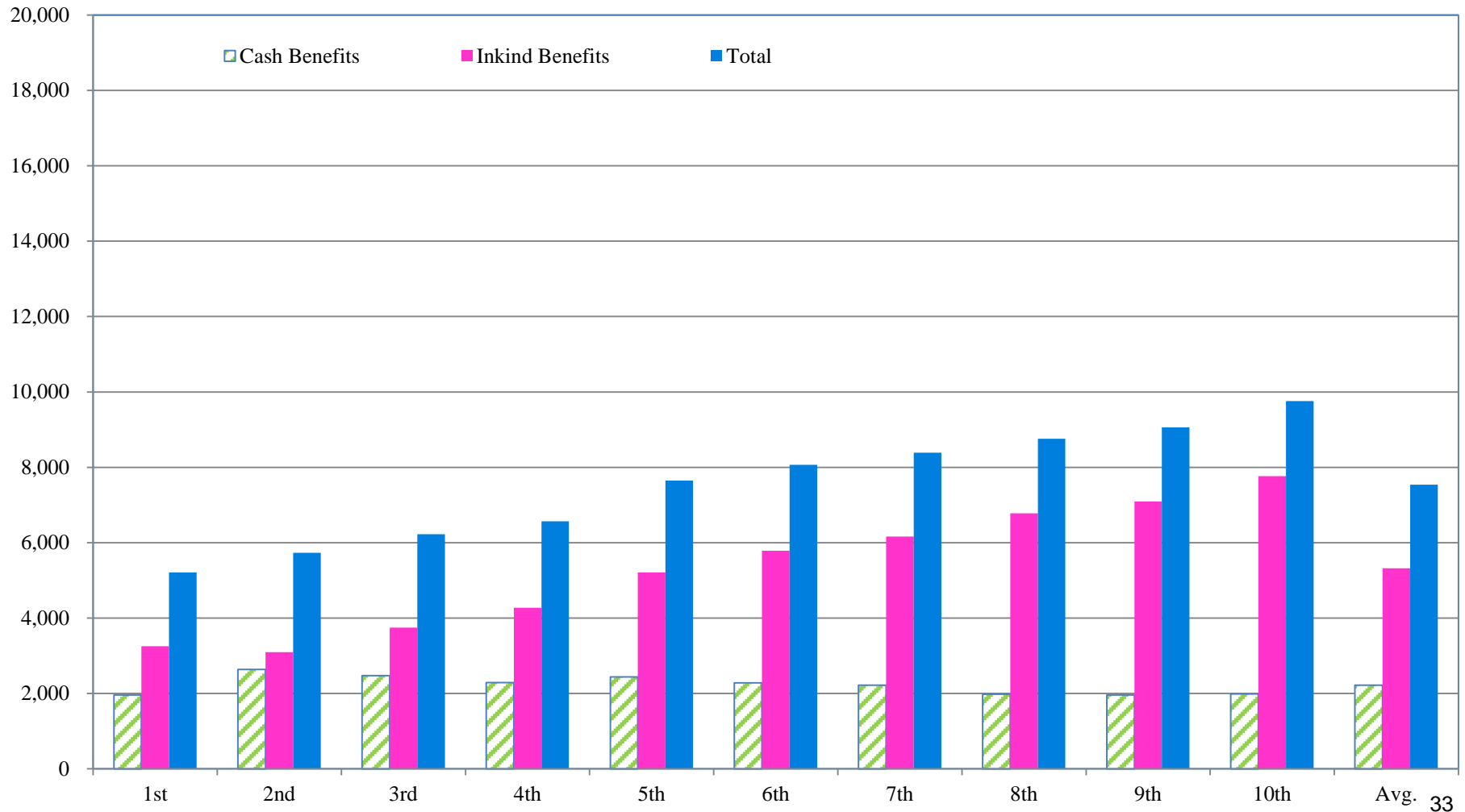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19] 국민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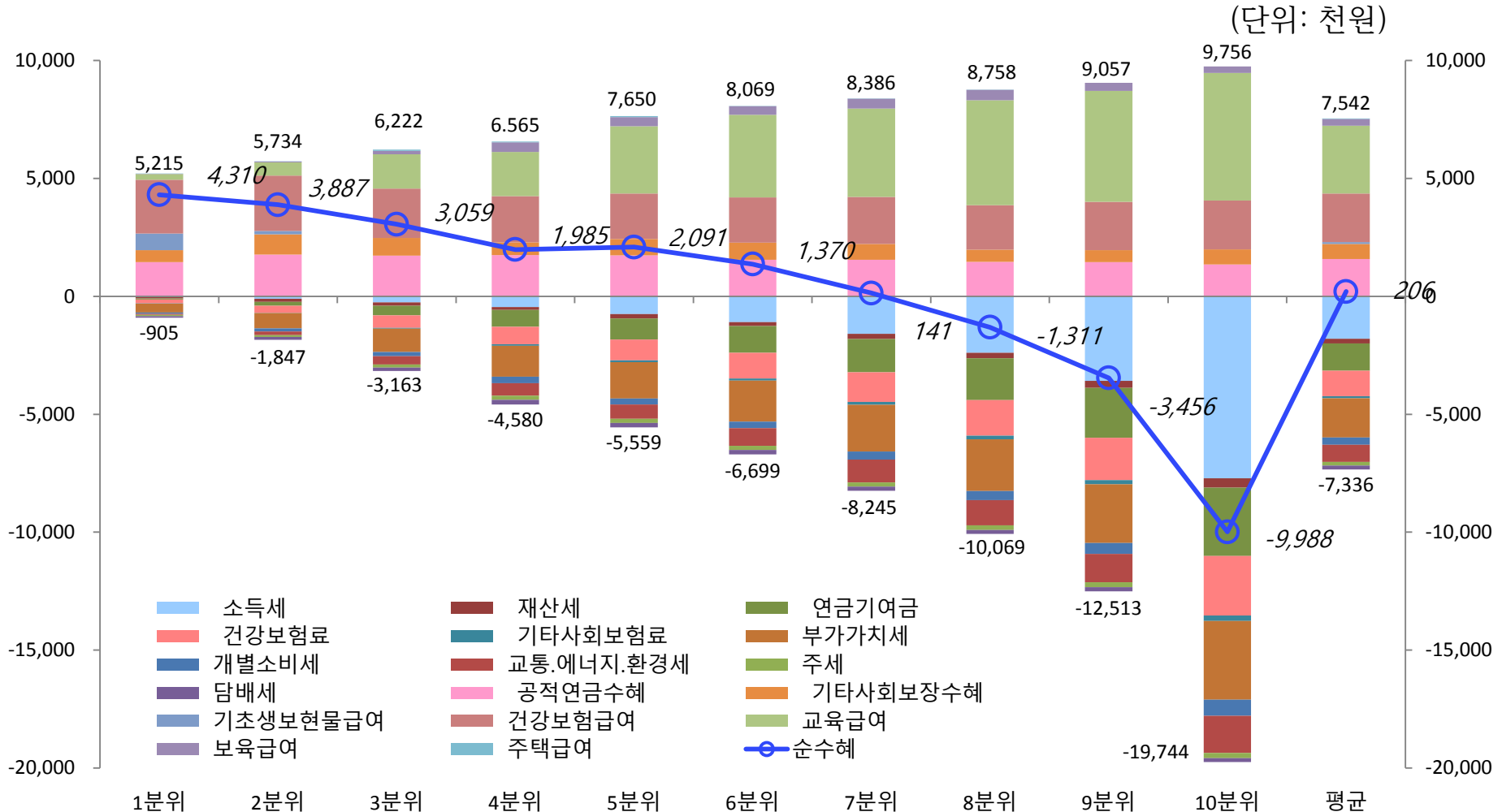
(단위: 천원)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가. 부담·수혜의 추정

[그림 20] 소득분위별 평균 수혜·부담 분포 (2013년)



주: 부가가치세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 명목세부담의 약 20%)를 비례적으로 배분한 추정결과임.

개별소비세는 실제 세수를 총추계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수조정된 값 기준임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나. 부담·수혜구조의 특징

##### □ 부담구조의 특징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부담액 및 소득 대비 비율도 상승: **누진적 부담 구조**
- 특히 소득세, 공적연금, 교통세 등의 누진부담 구조가 두드러짐
- 주세,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두드러지나 나머지 소비세는 대체로 비례적 또는 미약한 누진적
- 10분위/1분위 부담 상대비: **21.8(배)** (=19,744/905천원, 2013년)

##### □ 수혜구조의 특징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수혜액은 커지나 소득 대비 비율은 하락: **역진적 수혜 구조**
- 공적연금, 건강보험급여 등은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은 커지나 실효수혜율은 하락
- 기타사회보장수혜(기초생보 등), 의료급여 등은 저소득빈곤층에 수혜가 집중
- **교육급여** 등은 소득보다는 학생 수 등에 의존: **절대수혜 분포가 대체로 균등**
- 10분위/1분위 수혜 상대비: **1.87(배)** (=9,756/5,215천원, 2013년)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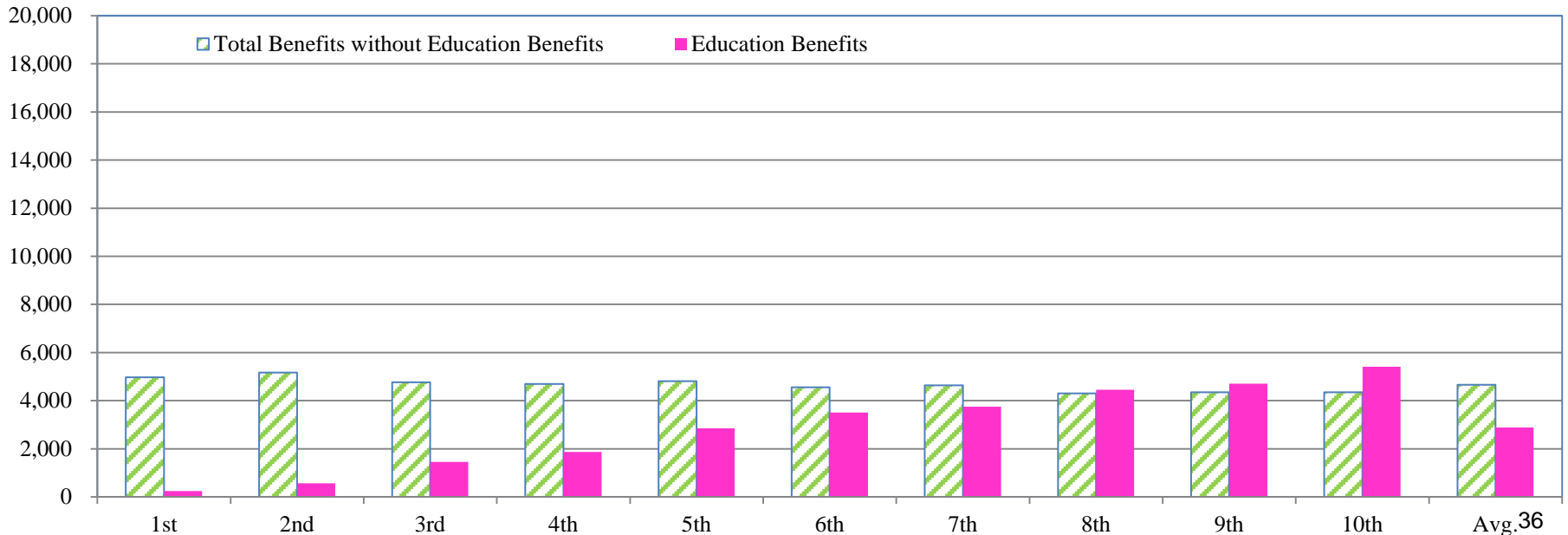
#### 나. 부담·수혜구조의 특징

##### □ 수혜구조의 특징 (계속)

- 교육수혜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1~3분위에서 수혜규모가 현저히 작으며, 4분위 이상에서는 평균 수혜액이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증가
  - 소득증가율보다 교육수혜 증가율이 낮아 역진적 분포 → 정(+)의 소득재분배
- 교육수혜를 제외하면 수혜 분포는 대체로 균등
- **교육수혜 제외** 10분위/1분위 수혜 상대비: **0.88(배)** (=4,347/4,968천원, 2013년)

[그림 19-1] 국민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2013년, 교육수혜 및 교육수혜 제외)

(단위: 천원)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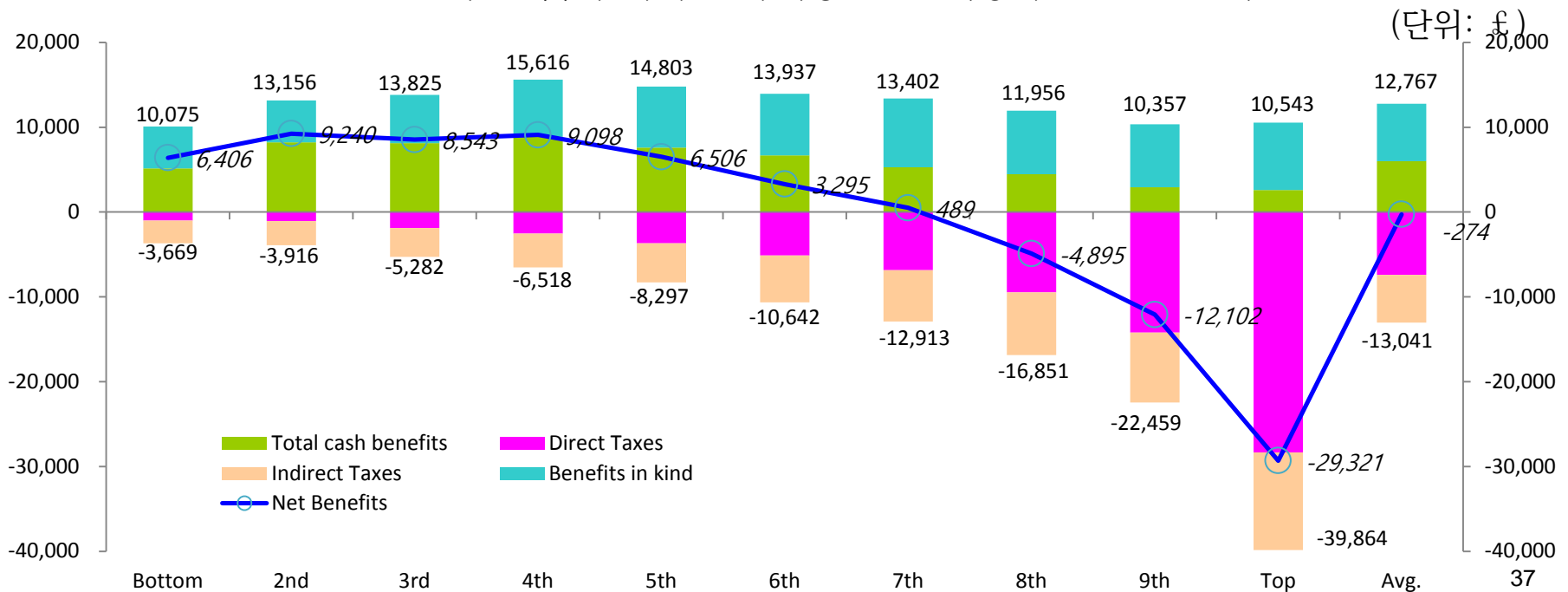
#### 다. 국제비교

##### □ 국제비교(영국)

-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 30,485파운드: 순수혜 가구 범위 (1~6분위)
- 부담·수혜의 10분위/1분위 가구당 평균 상대비 비교
- 

	부담			수혜			(단위: )
	10분위(A)	1분위(B)	(A/B,배)	10분위(C)	1분위(D)	(C/D,배)	
한국 (2013)	-19,744천원	-905천원	21.8배	9,756천원	5,215천원	1.9배	
영국 (2012/13)	-39,864파운드	-3,669파운드	10.9배	10,543파운드	10,075파운드	1.0배	

[그림 21]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영국, 2012/13년)



주: Tonkin (2014)를 기준으로 저자 수정 작성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다. 국제비교

<표 4> 부담 및 수혜의 소득계층별 분포(영국, 2012/13년)

(단위: £)

	Bottom(A)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Top(B)	Avg.	B/A
<i>Decile points (£)</i>	10,174	13,452	16,738	20,549	24,266	29,165	34,818	42,894	57,147			
Number of households in the population ('000s)	2,649	2,656	2,658	2,653	2,654	2,654	2,653	2,651	2,659	2,656	26,544	
Original income												
Wages and salaries	1,339	2,403	5,185	7,603	12,340	18,150	25,165	35,122	50,471	83,953	24,173	62.7
Imputed income from benefits in kind	2	6	15	28	8	111	192	292	658	1,288	260	644.0
Self-employment income	405	429	650	836	1,476	1,685	2,537	2,728	3,412	15,175	2,933	37.5
Private pensions, annuities <sup>1</sup>	780	1,471	2,435	3,120	3,592	4,205	4,389	4,084	4,053	4,937	3,307	6.3
Investment income	180	230	338	375	534	623	707	830	1,487	5,791	1,110	32.2
Other income	140	133	135	309	439	261	386	385	333	729	325	5.2
Total	2,846	4,672	8,759	12,270	18,390	25,035	33,376	43,441	60,414	111,874	32,108	39.3
Direct benefits in cash												
Contributory	3,065	4,522	3,983	4,516	3,614	3,366	2,542	2,335	1,599	1,683	3,121	0.5
Non-contributory	2,075	3,686	4,156	4,373	3,989	3,331	2,737	2,112	1,318	902	2,869	0.4
Other non-contributory benefits <sup>5</sup>	142	157	139	121	140	127	63	72	76	34	107	0.2
Total cash benefits	5,138	8,209	8,138	8,890	7,602	6,696	5,279	4,449	2,915	2,586	5,990	0.5
Gross income	7,984	12,881	16,897	21,161	25,992	31,731	38,655	47,890	63,329	114,460	38,098	14.3
Direct taxes and Employees' NIC												
Income tax	286	389	895	1,345	2,068	3,000	4,111	5,703	8,905	21,275	4,798	74.4
less: Tax credits	9	16	39	135	206	241	326	176	61	41	125	4.6
Employees' NI contributions	54	124	325	473	824	1,293	1,865	2,683	3,958	5,446	1,704	100.9
Council tax and Northern Ireland rates <sup>6</sup>	958	944	990	1,067	1,144	1,197	1,286	1,323	1,429	1,671	1,201	1.7
less: Council tax benefit/Rates rebates	287	376	282	220	154	120	79	66	14	2	160	0.0
Total	1,002	1,065	1,888	2,530	3,676	5,128	6,858	9,467	14,216	28,350	7,418	28.3
Disposable income	6,982	11,816	15,009	18,630	22,316	26,603	31,798	38,423	49,112	86,110	30,680	12.3
Indirect taxes												
Total indirect taxes	2,667	2,851	3,394	3,988	4,621	5,514	6,055	7,384	8,243	11,514	5,623	4.3
VAT	1,086	1,141	1,339	1,629	1,939	2,394	2,645	3,230	3,774	5,595	2,477	5.2
Duty on tobacco	228	294	343	341	364	372	361	456	353	211	332	0.9
Duty on beer and cider	61	47	74	87	91	122	155	192	192	231	125	3.8
Duty on wines & spirits	98	92	131	121	154	183	191	285	318	500	207	5.1
Duty on hydrocarbon oils	148	190	258	347	414	532	628	771	733	856	488	5.8
Post-tax income	4,315	8,965	11,615	14,642	17,695	21,089	25,742	31,038	40,869	74,596	25,057	17.3
Benefits in kind												
Education	1,651	967	1,586	2,054	2,742	2,894	3,845	3,021	3,173	3,346	2,528	2.0
National health service	3,163	3,813	3,828	4,407	4,180	4,122	4,049	4,207	3,992	4,235	4,000	1.3
Housing subsidy	5	9	9	9	6	5	3	3	2	1	5	0.2
Rail travel subsidy	31	27	36	33	44	54	67	123	156	232	80	7.5
Bus travel subsidy	81	98	128	128	147	112	126	123	112	136	119	1.7
School meals and Healthy Start Vouchers <sup>7</sup>	7	33	99	95	81	55	33	29	8	7	45	1.0
Total	4,937	4,947	5,687	6,726	7,201	7,241	8,123	7,507	7,442	7,957	6,777	1.6
Final income	9,252	13,912	17,302	21,369	24,896	28,330	33,865	38,546	48,311	82,553	31,834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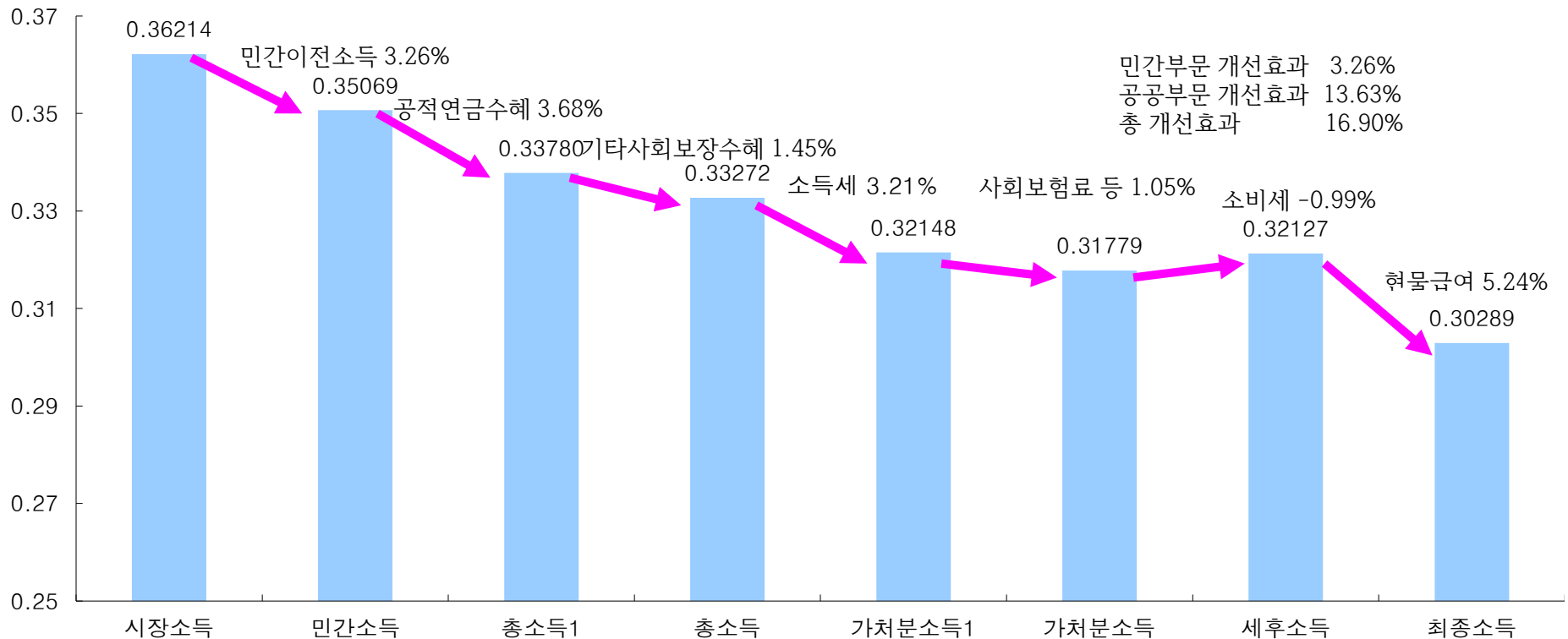
자료: Tonkin (2014) (Table 24 인용)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라.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는 13.6%(2013년)
  -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항목: 현물급여(5.24%p), 소득세(3.21%p), 공적연금(3.68%p), 기타사회보장수혜(1.45%p)
  - 소비세의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편(-0.99%p)

[그림 22]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2013년)



주: 총소득1 = 민간소득 + 공적연금, 가처분소득1 = 총소득 -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민간소득 지니를 분모로 하여 단계별로 측정한 지니계수 변화율로 계산. 소비세는 누적효과(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개별소비세제는 실제세수를 기준으로 계수조정 한 기준으로 추정함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라.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민간소득→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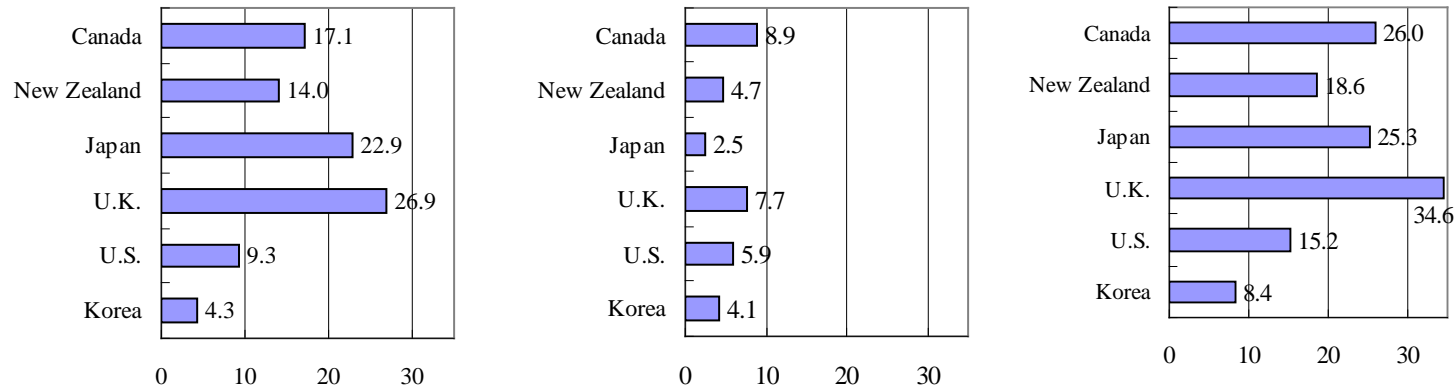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 15.2%(미국)~34.6%(영국)

○ 한국: 8.4%

□ 선진국: 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 한국은 현금급여(각종 연금, 기초생보, 실업급여 등)보다는 직접세 통해 재분배

[그림 23]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의 국제비교(OECD 기준 환산치)  
현금수혜(A)                      조세(B)                      계(=A+B)



Not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are measured by tax/benefit-induced percentage changes in Gini coefficients. The figures are calculated based on data from the U.S. Census Bureau (2007) for 2005 data on the U.S., Jones (2008) for 2006/07 data on the U.K.,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2007) for 2005 data on Japan, Hyslop and Yahanpath (2005) for 2004 data on New Zealand, and Statistics Canada (2007) for 2005 data on Canada. The figures for Korea are from the authors' calculations for 2009.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마.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가 작은 편

○ 한국(09)	미국(05)	일본(05)	영국(05-06)	뉴질랜드(04)	캐나다 (01)
○ 3.2%	6.5%	3.2%	8.1%	5.4%	10.9%

- 그중 한 요인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

-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2008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15.0%	37.9%	22.6%	29.9%	41.9%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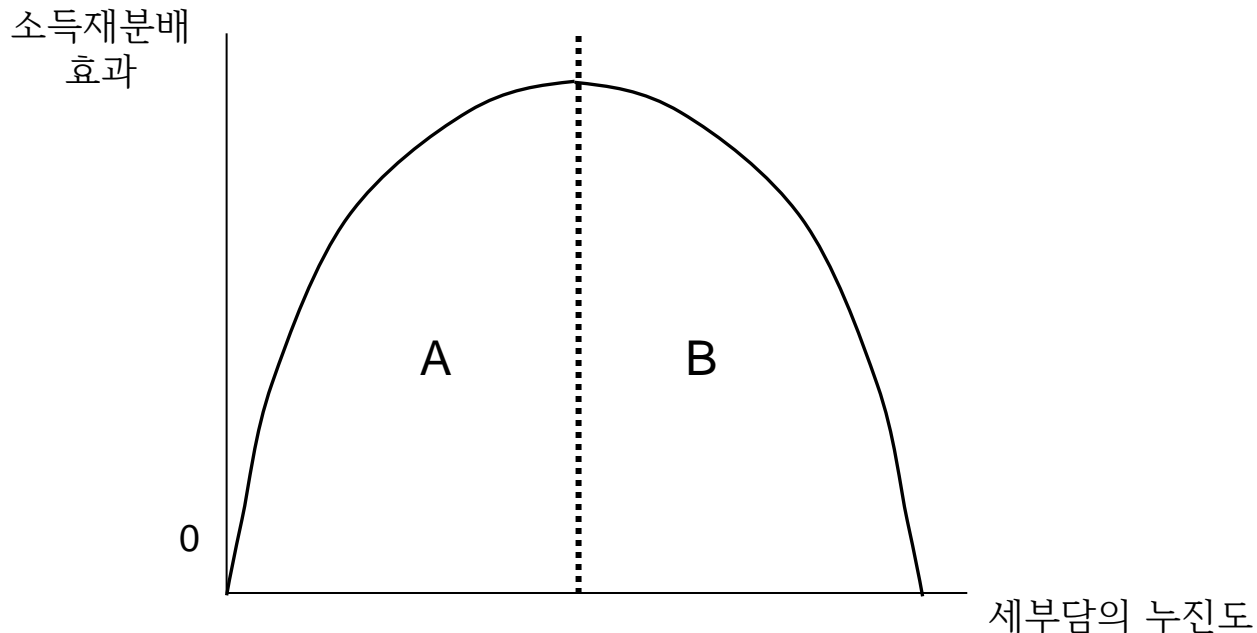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마.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역U자
  - 주로 횡축은 소득공제 수준의 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B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
  - 세율의 변화는 주로 역U자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

[그림 15]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 3.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 마.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 1995~2000년에 비해 최근 소득세의 누진도는 커졌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4.3%(1995년)에서 3.2%(2009년)로 **축소**

○		'95	'00	'03	'06	'09
지니계수(하락률)		-4.3%	-3.2%	-3.4%	-3.3%	-3.2%

- 근본 원인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하락**과 그에 따른 **세수감소(세수비중 하락)** 등에 기인

- 반면에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상승**(즉, KPS의 하락)

-		'95	'00	'03	'06	'08	'09
KPS지수		0.675	0.699	0.658	0.662	0.667	0.637

- 일반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누진도가 커지는 경향

- 세수규모의 하락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감소 경향

---

## 4. 기타

## 4. 기타

- Piketty 보고서 이래 상위소득자 소득비중 연구 유행
  -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서베이자료보다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비중)가 훨씬 더 크게 측정
  - 이는 **근로·사업소득**만을 주 대상으로 채택하였기 때문
    - **민간이전소득, 자본이득** 등이 분석에서 제외: 이들 소득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크고, 국민계정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개인기준** 적용 및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cf. 선진국: 균등화지수 적용하여 기타 가구원 소득을 양(+)으로 설정하는 차이
    - **조세 소득개념(예: Haig-Simon類)** vs. **국민계정 소득개념(부가가치)**의 차이
    - **과세자료 소득은 소득재분배 이전 소득 기준**이므로 지니계수는 높은 편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현저하게 높고, 그동안의 팽창적·외연적 성장기조 속에서 **자본이득** 비중이 현저히 높았던 구조
  - 생애주기상 **은퇴기 직후의 연령층**에서는, 자녀 혼수자금 마련, 작은 주택으로의 대체구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자산(주로 주택)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
  - 생애주기상 이들의 근로·사업소득비중은 매우 작지만, 자본이득을 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던 연령층의 소득비중이 상승
  - ∴ 근로·사업소득세 과세자료만으로 추정한 상위소득자 비중은 실제 소득분배 구조와 차이가 있으므로 **상방편의(upward bias)**가 존재

---

# 참고문헌

- 성명재,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연구보고서 11-03,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성명재·박기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2009, pp. 5~37.
- Kim, N. and J. Kim,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2014.
- Tonkin, R.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12/2013: Further Analysis and Methodology,”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4.

---

감사합니다

---